

## 04 • 권두언

충청남도 3농혁신, 이제는 실천이다 | 허승욱

## 06 • 특집 | 충청남도 3농혁신, 이제는 실천이다

충청남도 3농혁신 비전과 추진전략 | 채호규

FTA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 대응방향 | 김양중

충청남도 농어촌 응원운동 전개 방안 | 안충섭

## 24 • 충남논단

인사행정의 정보화와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한·중·일 비교 | 신용철·고승희

## 34 • 충남 마을 기행

갯벌체험과 약쑥찜질로 유명한 당진푸레기 마을 |

정봉희

## 40 • 열린마당

행복도시의 성공적 추진전략과 비전 | 송기섭

## 46 • 해외리포트

조선족 추장(?)의 중국 배낭여행기 | 이인배·박인성

부탄이 만든 행복의 철학, GNH | 고승희·백운성

## 65 • 오피니언

과학벨트는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야 성공한다 | 육동일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권경득

## 70 • 충남 소식

## 74 • 연구원 소식

## 79 • 충남 문화유산

부전대동계 문서

## 충청남도 3농혁신, 이제는 실천이다

허승욱 | 충남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 위원장, 단국대 교수



**얼마** 전 학생들에게 시간 참 빠르다면서 '옛날얘기 하나 해줄까?' 하니, 해달란다. 초등학교 시절 전교생이 깡통하나 들고 산에 올라 송충이 잡던 얘기였다. 깡통을 채우지 못하면, 꽤나 심란한 하루가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학생들은 정말이냐고 호들갑이다. 다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요새 송충이 본지 오래다.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흔하던 동네 어귀의 쌀집들도 없어졌고, 쌀집만큼이나 많던 사 진현상소도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불현듯 농업이 멸종될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번져나간다. 한미 FTA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요즘의 심경이다. 그 많던 제비들이 도시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농업도 천천히 그렇게 되는 것을 아닐까하는 걱정이 찌뿌둥한 날씨만큼이나 무겁게 나를 누른다.

이쯤 되면 멀지 않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피해는 어느 정도일지, 어떤 분야가 어려워질 것인지 등등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다. 우리 농산물과 외국산 농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기울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다. 양담배의 경우다. 양담배가 대한민국에 상륙하던 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게다. 양담배 수입개방에 대한 날선 찬반이 있었고, 시장점유율에 대한 많은 분석도 있었다. 수많은 잎담배 생산자를 업은 전매청(KT&G)과 다국적 담배회사들과의 한 판 전쟁이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양담배 피우면 마치 매국노 같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양담배는 고작 20여년 만에 소비자들 주머니로 성큼 들어 왔고, 개방 당시에만 해도 10%대에 머물거라는 시장 점유율은 어느덧 40%대를 훌쩍 넘어섰다. 문제는 높아진 양담배 시장점유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KT&G는 담배 경쟁력을 갖춘다는 이유로 2001년에 71%였던 국산잎담배 사용비율을





26%까지 낮추고, 외국산 잎담배 사용비율을 74%로 점진적으로 늘려갔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국산잎담배가 외국산에 비해 3배 비싸기 때문이란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다.

한-EU, 한미 FTA,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호주 FTA 등 개방의 파고에 직면한 우리 농업도 이와 어찌 다를까. 물론 FTA 초기에는 당분간 고율 관세를 유지되기 때문에 나름 경쟁한다 하겠지만, 물량으로 들이대는데 당할 도리가 없을게다. 그나마 허용된 범위에서 제아무리 관세를 붙여본들 막대한 농업보조금과 낮은 생산비를 앞세운 가격경쟁에 당할 도리는 없다. 그뿐인가. 수출국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고품질은 기본이며, 엄청난 광고를 통한 공세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관세장벽이 하나 둘 모두 무너질 십수년 이후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엄동설한의 한겨울로 내몰리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지난 반만년 한반도를 살려왔던 우리 농업을 포기할 수야 있겠는가? 농업을 포기한 나라, 식량주권이 없는 나라는 결국 식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왜 그렇게 농어업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자국의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려 노력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야 한다.

충청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농업규모가 큰 지역이다. 농어업인들도 충남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민선5기 충남도의 대표적인 전략과제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뜻하는 3농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도지사는 앞으로 3농혁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로 충남 도정을 평가받는다고 했다. 도의 싱크탱크인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농업·농촌 연구에 밤이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올해 1월에는 생산자, 소비자, 학계, 도의원이 모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3월부터는 농어민, 충남의 공무원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충남발전연구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농어업·농어촌혁신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이를 8월 30일에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그리고 추수가 끝날 무렵부터 충남의 16개 시군의 생산자, 기술센터 공무원, 읍면동장, 농협 조합장 등 충남 농어업 일꾼들과 공감,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1년 반만에야 비로서 충남 3농혁신의 틀을 마련한 셈이다. 농어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켜나가자는 것이 3농혁신이며, 도시의 소비자들과 공생하자는 것이 3농혁신이다.

이제 뜻을 모았으니 남은 것은 참여와 실천이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소비자들과의 강한 신뢰만이 무차별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대안은 신뢰와 품질밖에 없다. 마치 말기 암 환자에게 두통약 한 알 처방한 심정이지만, 우리가 희망의 끈과 실천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3농이 우리 미래의 명운을 걸머지고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 3농혁신 비전과 추진전략

채호규 | 충청남도 농수산국장

오늘날 충남의 농어업·농어촌은 DDA와 FTA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농림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농어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삶과 직결되는 정주환경 또한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민의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농어촌으로의 회귀현상 등 긍정적 의미에서의 농어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는 농어촌지역을 단순한 농어업 생산만의 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삶터), 경제활동 공간(일터), 그리고 환경 및 경관공간(쉼터)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충남 농어업, 농어촌의 현실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농어업, 농어촌의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농어업인과 도시민, 농촌과 도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고자 농어업, 농어촌 혁신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 농어촌 혁신기본계획에서 3농이란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을 의미하며, 혁신이란 묵은 제도와 방식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농 혁신이란 농어업 문제·농어촌 문제·농어업인 문제를 상호 연관된 일련의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총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종전계획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이 아니고 계승과 혁신의 기초위에 기존사업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여 유용한 상품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2012까지 4개년동안 4조3천9십억원을 투자 34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업인, 소비자,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농어촌 사회건설에 추구하는 것이다.

## 1.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 수립배경

### 가. 외생적 개발전략에서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전환 필요

충남은 2009년 540억 달러의 수출실적으로 전국 1위, 29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국내 무역흑자의 71% 담당하지만 충남경제의 성장은 대부분 수도권에 인접한 서북부 지역에 진출한 재벌 대기

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장과실은 외부로 유출되고 실질적으로 충남도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해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외생적 개발전략을 채택한 결과로 이러한 전략은 지역의 쇠퇴를 가져오고 지역의 종속적·왜곡적·파괴적 불균형 개발을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통합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발전 불가피

충남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19.5%, 생산액 7.2%를 차지하고 있다(2008년 기준). 충남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서북부 지역과 계룡시 등 5개 시군을 제외하면 농림어업은 충남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충남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어업의 발전이 불가피하다. 충남의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 아산시 등 서북부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의 농업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며, 이러한 농업생산(1차산업)의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농식품 관련 2, 3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의 쇠퇴는 곧 지역경제의 쇠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는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다.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은 충남도민 모두에게 필요

도민의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권리인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충남 농어업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국토·자연환경 보전기능,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기능, 휴양제공 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붕괴는 지역경제의 순환, 생산과 소비의 순환(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도시와 농촌의 순환의 고리가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공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 2. 충남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비전, 목표 및 전략

### 가. 비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순환,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 도시와 농어촌의 공생이 이루어지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및 충남 도농 공동체를 형성하여 농어업인, 소비자,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 나. 목표

#### ①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및 열악한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②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충남도민 및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생산·보급하는 지역 먹을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③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인적·물적 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도농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 다. 3대 추진전략

#### ①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친환경 농어업과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순환식품체계로 뒷받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안심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부가가치 증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 ②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농어촌 사회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지역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③ 농어촌 주민의 역량강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지역만들기)의 성공을 위한 가장 근본적 요소는 그 지역주민의 주체역량이 얼마나 배양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학습·실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역량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 라. 충남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특징

### ① Hard Power에서 Soft Power로의 전환

기반정비, 시설조성 등 하드파워 중심에서 지역리더 양성, 주민역량 강화, 제도개선 등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였다. 총 347개 사업 중 기존 271개 사업은 소프트 비중이 42%에 머물렀지만, 신규사업 76개 사업은 소프트 비중을 65%로 확대하였다. 기존의 하드웨어 위에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물적토대위에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였다.

### ② 행정주도에서 민관협력 강화로

모든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지역주민 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일방적 주도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계획수립단계부터 민간인이 참여하는 농어업, 농어촌 혁신위원회에 도 출연연구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가 각자 역할분담을 나누어 추진하였고 17차례 민관협력 세미나, 11개분야별 T/F팀 검토회 등을 40여회 개최하여 현장농정의 의견 및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였다.

### ③ 대외경쟁력강화에서 지역연대 강화로

경쟁력 위주의 농정에서 농어업·농어촌 가치를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육성을 도모하고자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강화, 가족농 중심의 지역농업 조직화를 통하여 일시적인 혁신운동에 머물지 않고 도농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사는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다.

### ④ 외생적 발전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농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지역의 문화적 토대위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새로운 기업의 창업, 전통산업과 농어촌 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다각화를 도모하였고,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농어촌지역이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다.

## 마. 예산투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4조 3천 9십억원을 투입하여 11개분야 347분야의 시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는 2조628억원, 도비 4,485억원, 시군비 1조709억원, 기타 6,267억원으로 구성되며 기존사업 76건에 6,694억원, 기존사업 271건에 3조6,39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구 분 |       | 재 원 별(백만원) |                    |                  |                    |                 |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융자              | 자부담              |
| 합 계 |       | 4,308,983  | 2,062,848<br>(48%) | 548,510<br>(13%) | 1,070,928<br>(25%) | 183,496<br>(4%) | 443,201<br>(10%) |
| 계   | 2011년 | 1,021,954  | 491,528            | 118,803          | 269,406            | 44,174          | 98,043           |
|     | 2012년 | 1,083,594  | 510,565            | 142,751          | 268,740            | 45,877          | 115,661          |
|     | 2013년 | 1,098,152  | 527,233            | 143,391          | 267,572            | 46,440          | 113,516          |
|     | 2014년 | 1,105,283  | 533,522            | 143,565          | 265,210            | 47,005          | 115,981          |

## 3. 충남도정의 미래상

본 계획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지역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행정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이 가시화될 것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확대될 것이며 지역내 농수산물 유통망 개선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친화형(유기농업) 및 자원절약형 농업의 확대에 따른 지역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교류 지산지소 학교급식 등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 농수산물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서비스 등 비농업부문이 농촌경제 확대와 농어업의 발전과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및 열악한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며 1차산업 뿐만아니라 2차와 3차까지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가 출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비롯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인적, 물적, 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 FTA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 대응 방향

## - 한·미/한·EU FTA를 중심으로 -

김양중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I. 서론

#### 1) 필요성 및 목적

세계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는 사자성어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말인 것 같다.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는 물론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악재는 세계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는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동반적 위축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아울러 FTA라는 또 하나의 변수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FTA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즉 정부는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홍보하고 있지만 내포되어 있는 위험도 만만치 않다. 둘러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농어업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 된지도 어느덧 7년이 지났다. 그 이후에도 한·EU FTA 등 6개의 FTA가 발효되었고, 결국 한·미 FTA 비준도 통과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그 동안 농어민들은 FTA에 반대하면서 투쟁은 물론 나름대로 대응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년이라는 세월 속에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정부의 수많은 약속과 대응하에서 얼마나 발전하고 살기 좋아졌는가? 이 물음에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고 그동안 지원책의 문제점과 충남 농어업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경북·충남·전남 등 농어업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시장개방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충남은 농어업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 2) 충남의 농어업 교역규모

〈표 1〉 충남의 수출입 현황(2010)

(단위 : 백만불)

| 대륙   | 총교역액   | 수출     | 수입     | 수지     |
|------|--------|--------|--------|--------|
| 아시아  | 46,829 | 38,278 | 8,551  | 29,726 |
| 중동   | 11,158 | 1,440  | 9,718  | -8,278 |
| 유럽   | 8,112  | 5,704  | 2,408  | 3,296  |
| EU   | 6,350  | 5,065  | 1,285  | 3,779  |
| 북미   | 6,309  | 4,858  | 1,451  | 3,407  |
| 중남미  | 4,072  | 3,232  | 840    | 2,391  |
| 아프리카 | 377    | 236    | 141    | 94     |
| 대양주  | 2,088  | 306    | 1,782  | -1,477 |
| 기타지역 | 1      | 1      | 0      | 1      |
| 계    | 78,946 | 54,055 | 24,891 | 29,16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0년 기준 충남은 타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291.6억불)를 기록하였고, 특히 북미와 EU 지역에서는 각각 34.1억불, 37.8억불의 흑자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농어업 교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충남의 2010년 농어업 총수출은 2.8억불, 총수입은 9.2억불로 6.3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적자폭이 가장 컸으며 축산물, 수산물 순으로 적자폭이 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한·EU FTA는 충남 농어업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표 2〉 충남 농어업 수출입 현황(2010)

(단위 : 천불)

| 구분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
| 농산물 | 205,776 | 704,699 | △ 498,923 |
| 축산물 | 56,311  | 162,850 | △ 106,539 |
| 임산물 | 1,114   | 13,897  | △ 12,783  |
| 수산물 | 19,012  | 34,485  | △ 15,473  |
| 총계  | 282,212 | 915,932 | △ 633,72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특히 충남이 전체교역에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업분야에서의 적자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농어업의 피해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 II. FTA가 충남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충남은 대미와 대EU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이므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는 충남의 수출확대를 가져와 지역경제 전체로 보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은 광·제조업이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46%)이 높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농어업의 경우 피해가 예상되어 정확한 피해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충남의 GRDP 대비 농어업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농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과 농어업의 비중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전체 GRDP | 47,497  | 51,361  | 55,148  | 57,974  | 65,760  |
| 농어업 비중  | (7.15%) | (6.64%) | (5.83%) | (5.52%) | (5.11%) |

자료 : 통계청(KOSIS), 주: ()는 전체 GRDP 대비 구성비임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는 축산분야이며 과수, 원예, 곡물, 수산, 특작 순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축산의 경우 양돈, 한육우, 양계 순으로 피해가 예상되며, 과수의 경우 배, 사과, 포도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EU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 역시 축산분야이며 원예, 수산, 과수, 곡물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한·미 FTA 이행시 충남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발효 후 15년까지 연평균 1,1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한·EU FTA로 인한 충남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25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한·EU FTA로 인한 농어업 생산감소액 중 90%이상이 축산분야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나 손실액만을 보고 손실액만을 보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액은 예측일 뿐이다. 손실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로 인한 농어민들의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 III. FTA 농어업 대응방안

본 글에서는 FTA 농어업 대응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요구사항과 충남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다.

〈표 4〉 FTA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요구사항 및 충남도가 해야 할 일

| 구분           | 내용  |
|--------------|---|
| 중앙정부<br>요구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보전직불제의 자격요건 완화 및 확대</li> <li>○ 농어촌 고령화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li> <li>○ 한계농가 폐업지원제도 강화</li> <li>○ 보완대책 마련 시 포괄보조 예산 배정</li> <li>○ 추진사업의 지자체 보조비율 축소</li> </ul> |
| 충남도<br>역 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와의 대화채널 확보</li> <li>○ FTA 가용예산 확보</li> <li>○ 충남만의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li> </ul>   |

먼저 중앙정부 요구사항이다. 중앙정부는 첫째, 피해보전직불제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한 사례가 전무하다. 보여주기 위한 제도는 농어민들에게 의미가 없다. 보다 실효성 있고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후계농업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농어촌의 고령화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확실한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후계농업인 육성은 급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계농어가의 폐업 및 전업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폐업 및 전업은 반드시 농어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체작목 발굴 등 지원을 위한 지역별 갱생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보완대책 마련시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예산의 배정과 추진사업의 지자체 보조비율 축소이다. 지자체의 재정과 특성을 반영하여 일괄적인 매칭비율을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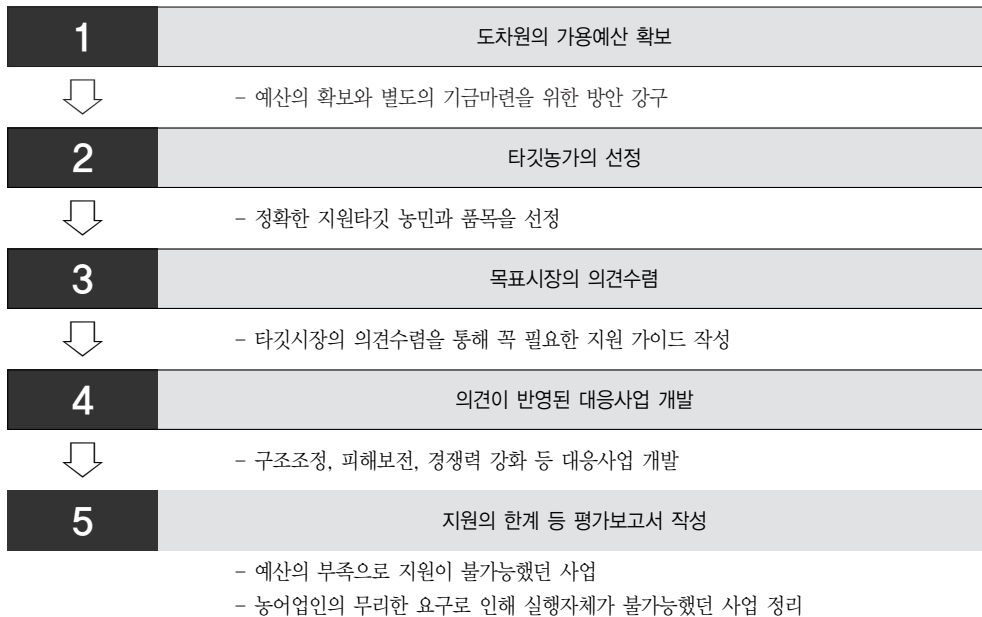
다음은 충남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먼저 중앙정부와의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또한 충남도만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이용 가능한 자본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충남만의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매칭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충남도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 IV. 충남도 농어업 지원 로드맵

이제 충남이 FTA를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그동안 충남은 물론 타시도에서도 FTA 대응을 위한 많은 지원책을 발표하고 그 지원책에 대한 홍보에 여념이 없

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농어민들이 그 지원책에 만족했는가?”라고 지자체에게 묻는다면 어느 지자체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여 충남의 지원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5〉 FTA 농어업 지원 로드맵



첫째, 도차원의 가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사업에 대한 매칭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정확한 지원타깃 농어가를 선정해야 한다. 모든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농어가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의 폭을 선정해야 하는 어렵고도 힘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원타깃 농어가가 선정되었으면 목표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넷째, 그리고 농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대응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구조조정, 피해보전, 경쟁력강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건 반드시 중앙정부 지원책보다 지역현실을 더 잘 고려해서 사업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잘 정리하고 문서화하여 한·중 FTA, 한·일 FTA 등 향후 다가올 FTA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한 후에 충남만의 한계에 직면한다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한 목소리는 내야 한다. 충남 농어민들의 목소리는 전달해야 한다. 이득을 얻은 기업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는도 중요한 시점이다. 농산물 소비자인 우리들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 더 애착을 가져야 한다. 이제 농어민들, 우리 농산물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

### V. 결론

중앙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FTA는 우리나라에게 이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FTA로 인해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농어업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FTA로 농어업은 물론 자영업,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이 무너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FTA 피해 및 취약계층을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중앙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한·미/한·EU FTA로 인해 충남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9,494억원의 이득이 발생할 것이고 농어업에서는 연평균 1,415억원의 피해만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 산술적으로 매년 8,000억원 이상이 충남의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이성이 허락하지 않는다. 농어업은 바로 우리의 먹거리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남이 집중해왔던 기업유치, 지역개발 등에서 한번쯤 우리의 농어민들을 돌아볼 때가 된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FTA의 시작이다. 한·미/한·EU FTA는 본격적인 FTA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이다. 분명히 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모두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나라 농어업의 몰락에 핑계를 댈 수는 없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충남은 FTA의 높은 파고 속에서 농어업을 살려야 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정책시험대에 놓여있다. 지금부터라도 충남은 생각에 대해 실천하는 모습을 농어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충남은 부정할 수 없는 농업도이다. 농어민들과 충남도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 충청남도 농어촌 응원운동 전개방안

안충섭 |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연구원

## 1. 머리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각종 산업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비시설, 교육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은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젊은층의 이탈과 WTO, DDA, FTA로 생존문제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이농현상은 농어촌사회의 고령화로 이어져 점점 농어촌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거리를 좁히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식생활교육, 체험교육 등을 통해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 및 체험생활 확대,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웰빙 분위기가 더해져 농어촌을 찾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과 농어민의 기대치가 엇갈리는 한편, 기반 시설마저 부족해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충남 농어촌 응원운동은 침체돼 가고 있는 농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생활 교육, 생태문화체험 등 상호 교류를 통해 농어민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식량자급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 과제 중 하나인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에 대한 현황과 계획, 그리고 이 사업을 지역에서 전개해 나갈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2. 도농교류 현황과 사례

지난 2008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농교류와 도농상생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있다.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도농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충남에는 “충청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가 2009년 10월 제정되어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계획수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관광 활성화와 도농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법과 조례에 따라 다양한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을 보면 2010년 말까지 도내에 81개소가 조성되어 7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표 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현황

| 구분 | 계   |     |          | 02~06년도 |     | 07~09년도 |     | 2010년도 |     |
|----|-----|-----|----------|---------|-----|---------|-----|--------|-----|
|    | 운영  | 조성  | 사업비 (억원)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 충남 | 76  | 81  | 142      | 31      | 62  | 40      | 80  | 10     | 30  |
| 전국 | 503 | 516 | 1,042    | 190     | 380 | 252     | 504 | 74     | 158 |

※ 2010. 7월 1일 중앙 점검 후 5개소(전국 13개소) 관리해제

정부주도의 정책 이외에도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시에서는 농촌 활력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도2촌 주말도시 육성, 사이버 공주시민제도, 공주 5도2촌 알밤특구 추진 등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도시민을 유치하여 체험, 관광,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컴(Green-Come) 청양 운동은 ‘농촌, 녹색, 자연, 전원, 시골로 오세요’라는 의미로 도시민들은 웰빙 욕구를 청양에서 만족시키고 지역 주민들은 체험, 휴양, 숙박, 농축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등 함께 도농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사업이 대표적이며 1사1촌 자매결연, 팜스테이 마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 900여곳의 마을과 기관이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교류실적도 2010년 한 해 동안 70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뿐 아니라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증진, 봉사활동 및 마을시설 개선,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팜스테이 사업은 단순한 농가민박이 아닌 농가에서 숙박을 하며 농촌문화체험, 관광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3개 마을이 운영중에 있다.

이외에도 각 충남도 및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제21, 농어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자생조직 등에서도 소규모로 도농교류 및 직거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 청양 알프스마을

“2009년 1월 처음 얼음축제 했는데, 그때 1,800만원 적자보고 주민 갈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신이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니까 믿어주시더라고요. 올 초(2011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얼음축제도 못하고 손해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이해해주셨습니다.” 천장리 알프스마을 황준환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지난 2005년부터 청양군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여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알프스마을은 여러 가지 모범사례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업초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을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마을리더의 노력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꾸준한 사업발굴로 현재는 매년 20만명이 넘는 체험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지난해 축제 등을 통해 5억원의 총수익을 거둬 농사소득의 두 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

칠갑산 밑에 자리 잡은 이 마을에는 도농교류종합센터와 농촌체험실습장이 있어 이곳을 찾아오는 도시민들은 실습장에서는 감자, 고구마, 고추, 상추 등을 심고 가꾸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축구장, 수영장 등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찾아드는 도시민들이 늘어나자 마을 주민들은 마을 축제를 기획해 여름에는 조롱박축제를 열고 겨울에는 얼음분수축제를 열어 마을을 찾는 사시사철 교류와 체험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루고 있는 알프스마을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마을리더의 노력과 주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농어촌 마을에서 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 ● 완주군의 농촌활력과 지역경제순환센터

전북 완주군에서는 2008년 농정기획단에서 제출된 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생산혁신, 유통혁신, 부채대책, 농촌활력증진, 노인복지증진 등 5개 분야 12개 시책을 내용으로 군비 5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농정혁신을 위해 완주군에서는 로컬푸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로컬푸드형 생산, 유통, 소비를 조직화하고, 추진조직의 정비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로컬푸드지원조례, 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등 제도마련과 농촌 활력화, 지역경제순환센터와 같은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형태인 ‘건강밥상꾸러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거점농민가공센터, 로컬푸드스테이션, 두레농장, 로컬푸드마켓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의 사례는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활성화 뿐 아니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조직, 제도 신설 및 세

부과제 추진 등 내생적 발전을 통해 도시민과의 거리를 좁혀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3. 일본의 농업농촌 활성화 국민운동과 효고현의 사례

일본은 식량자급률 저하, 농업생산 축소, 농촌지역 활력저하 등 농업농촌의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전체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사회의 창조'를 농정의 기본방침으로 확정하고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 농산물 소비확대 국민운동

일본정부는 식료자급률 저하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07년 7월부터 농림수산성 장관의 정책자문기관인 「식료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회의」를 발족시켜 전략회의에서 도출된 안을 바탕으로 2008년 식료자급률 향상 국민운동 「Food Action Nippon」을 발족하여 전 국민적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쌀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 ● 도농교류 확대 국민운동

도시와 농산어촌 간 사람들이 활발히 왕래하고, 쌍방의 생활문화를 즐겁으로써 일본이 all right(健全)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all right 일본회의」는 민간기업, NPO, 공공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장으로 농산어촌을 활용하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 행정이 일체가 되어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 숙박 체험활동, 식농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운동은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촌을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온전하게 물려주고자 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효고현의 도시민 유치현황

효고현은 지리적으로 일본의 혼슈(本州)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현청소재지인 고베를 중심으로 한신, 하리마 지역은 효고현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하며 철강, 조선, 기계 등 산업이 집중해 있는 대도시 지역인 반면, 다지마, 단바, 아와지 지역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강 등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여 농림수산업이 발달된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지역 활성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도시발전의 한계를 인식해 효고현지사가 도시민의 농촌이주 및 도농상생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표 2〉 효고현의 도시민 유치현황(유학열, 2009)

| 형태       | 내용   |
|----------|--|
| 다자연 거주사업 | 지방의 중소도시 혹은 농산촌 지역내 다자연지역에서 주말 휴일을 이용하여 체제하는 것을 말하며 체제 형태에 따라 2지역 거주형, 정주형, 영주형으로 구분, 우리나라의 5도2촌과 유사 |
| 시민농원     | 체제형 시민농원은 중산간지역의 주말형 체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풍토나 경관, 인정이나 인간성 나아가서는 일시적 체제나 반정주할 수 있는 시설         |
| 낙농생활센터   |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이 주된 목적이며 아울러 농업에 실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의 목적                   |

다자연거주란 “지방의 중소도시 혹은 농산촌지역 내에서도 특히 자연환경이 풍부한 다자연지역에서 주말·휴일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체제를 하거나 반정주(半定住)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사업을 구상하고 2002년부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거점시설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다자연거주교류 거점정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까지 매년 1개소씩 총 6개소를 조성하였다. 사업은 시정 뿐 아니라 민간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시정 또는 지역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NPO단체나 민간개발업자가 도농교류시설이나 전원주택, 전원체제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우선계획수립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에 근거한 기반정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다까정의 체제형 시민농원은 농촌에 주거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주말 체제가 중심이 된 양지역 거주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다. 지자체에서 농림수산성 등 여러 농촌개발 관련 사업을 활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시설관리 업무는 인근마을의 주민조직체에서 담당하고 시설임대료는 모두 1년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

체제형 시민농원은 단순히 중산간지역의 주말형 체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풍토나 경관, 인정이나 인간성, 나아가 일시적 체제나 반정주를 통해 점점 고향을 잃어 가고 있는 도시주민에게 매력 있는 생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낙농생활센터는 2006년 효고현에 의해 설립된 곳이다. ‘낙농(樂農)’은 농업을 즐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생활(生活)’은 말 그대로 삶을 의미한다. 센터는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이 주된 목적이며 아울러 농업에 실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의 목적도 있다. 센터는 과거 농업기술센터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류관(레스토랑, 요리체험교실-빵, 두부, 된장 만들기 등), 직판장, 표고버섯 재배관(실내에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체험 공간 마련), 농기구 전시관-농기구 렌탈, 교육장, 레스토랑, 그린하우스 모판재배 공간, 과수원(포도, 매실 등)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단계로 도심에 작은 교실을 열어 직장인이 농업에 관해 기초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2단계로 은퇴자들을 위한 농업교실을 40~50ha 정도의 농지를 이용해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6개월 단위로 운영한다. 3단계로는 농업에 좀 더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

으로 1년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3단계의 경우 비닐하우스와 농장을 제공하고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된다. 연간 약 70명 정도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낙농센터는 일반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하고 교육받는 과정을 통해 지역농산물 더 나아가 국내산 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게끔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농가를 위한 응원군을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4.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의 전개방안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농촌사회의 경제적인 문제해결 뿐 아니라 농촌공동체의 회복, 식량위기의 대안,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동안 도농교류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농촌 내부의 문제해결만을 위해 마을단위 시설개선이나 생산지원, 판매지원 등 도시 소비자를 인식하지 않고 진행된 면이 있다. 앞으로는 도시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상호보완, 상생협력을 목표로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필요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설투자 이전에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역량강화와 마을리더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매결연, 직거래행사 등 이벤트 행사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도시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체험 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시민은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농어촌의 응원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농교류 사업은 상호보완, 양방향적, 상호만족 등의 관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 초·중학생 농·산·어촌 체험교육 및 식생활 교육

교육의 장으로 농산어촌을 활용하기 위해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 숙박체험활동, 산촌유학 시범사업 등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농어촌의 중요성을 체험을 통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생활교육 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 상황에 맞는 식생활교육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청소년들에게 지역 먹거리, 지역농업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재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 귀농귀촌의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수립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에 따른 전원생활형 귀농과 젊은 세대들의 자발적 귀농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귀농인구도 농촌 활력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 귀농계획이 있는 예비 귀농인에 대해서는 정보제공과 예비 활동을 통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지역사회 적응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 각 지역별로,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맞춤형 귀농정책으로 전환해가야 할 것이다.

### ● 범국민 농어촌 응원운동 전개

일본에서 하고 있는 「Food Action Nippon」과 「all right 일본의회」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산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아침밥 먹기운동, 도농교류 활성화 운동 등 범국민적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주도의 일방통행이 아닌 소비자, 기업, 기관, NGO, 공공기관 등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농어촌 응원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5. 맺음말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어촌 응원운동은 도시민과 농어민의 교류를 통해 농어촌마을 활성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지원과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농촌체험, 식생활교육, 1사1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가 미미한 곳도 있고, 적은 예산이지만 성과를 내는 곳도 있다. 중요한 것은 추진주체의 의지와 상호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주민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도시민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을리더를 적극 육성해서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민과의 교류, 판매행사, 문화행사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농어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농어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있다. 또한 농업농촌은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자산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민전체가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를 인식하고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상생해야 할 것이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는 교육과 체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인식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김준호(2011), 희망제작소 커뮤니티비즈니스연구소 <http://blog.makehope.org/cb>  
 완주군(2011), 지속가능한 지역농업과 로컬푸드(2011로컬푸드 전국대회 자료)  
 유학열(2009), “일본 농촌의 도시민유치현장을 가다” 충남발전연구원  
 최동주(2008), “도·농교류와 농촌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공사  
 충남발전연구원(2010), 제1차 도시농어촌 활성화 연구회워크숍 자료  
 충청남도(2011), 충청남도 3농혁신 기본계획  
 황명철(2010), NHERI 리포트 제132호 “일본의 농업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효고현 홈페이지, <http://web.pref.hyogo.jp/FL/korean/index.html>

# 인사행정의 정보화와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한·중·일 비교

신용철 | 일본 호세이대학교 교수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1. 들어가며

1990년대 세계적인 트렌드의 중심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격한 발전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친 글로벌 스탠다드의 요구는 세계적인 과제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공공관리의 영역에서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Administration)」라는 세계적 조류의 영향을 받아 복지국가노선의 과감한 수정은 물론 국가와 정부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궤도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은 각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정보화추진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우리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일본의 U-Japan계획, 중국의 金盾정책 등은 이러한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매년 개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정보화의 내용은 전자정부(e-Government)를 대상으로 한다. 즉 전자정부

의 기념개념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는 정부를 말하지만 그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온 전자정부의 전략적인 추진은 1993년에 시작된 미국 국가정보화계획의 일환인 NT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개발에서 시작되어 2000년경에는 OECD가맹국 중심으로 일반화되었다.

OECD(2003)에서는 이 전자정부의 추진을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의 유효한 도구로서 다음과 같은 3개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인터넷기술을 통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 (2)정부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3)정보통신기술에 의한 행정의 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정부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제시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 방법과 법제, 나아가서는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정보통신기술을 구사하며 정부시스템의 정보화를 국가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자정부화계획 중에서 특히 공무원에

관한 인사행정의 정보화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인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효율적인 정부서비스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OECD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적부문에 요구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도구로서 가장 주목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을 비교분석하고 동시에 이러한 인사정보시스템의 추진에 관하여 당사자인 공무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한·중·일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정책과 [e-사람]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정책은 1990년대 후반 국가전략으로서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 중반에 와서는 UN과 OECD를 비롯해 국제적기관에서 공표하는 전자정부관련 지표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정보화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1993년의 초고속정보통신망(KII ; Korea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정비사업에서 시작된 전자정부정책은 종래의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6)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보화정책으로 그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전이 있었다.

1990년대의 후반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전자정부의 구축은 제도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적인 면에서는 1995년의 정보화촉진기본법과 2001년의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2007년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그리고 2009년의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제도적 기반으로서 제정·시행되었다. 2007년에 개정된 전자정부법(법률제 9705호)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기본 원칙과 추진방법 등을 정하고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사업의 촉진, 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의 증대를 통해 지식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에 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정보화추진의 기본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자정부정책의 제도적 기반으로 (1)국가사회의 정보화추진(전자정부, 공공정보화, 정보이용환경의 정비, 정보화역기능의 방지), (2)IT기술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IT산업의 기반정비와 신산업의 육성), (3)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과 고도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1996년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1999년 Cyber Korea21, 2002년 e-Korea vision2006, 2003년 Broadband IT Korea Vision2007, 2006년 U-Korea기본계획, 그리고 2008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정보화사업을 이끌어왔다. 2006년의 U-Korea기본계획은 유비쿼터스사회의 실현을 과제로 세계화, 산업, 제도, 기술의 4대 성장동력을 통하여 정부, 국토기반, 경제산업, 사회, 개인생활 등 5대 분야의 선진

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 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창의와 신뢰의 선진지식 정보화사회의 실현을 과제로 (1)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육성, (2)첨단디지털기술이 융합된 인프라의 정비, (3)신뢰의 정보사회 구축, (4)일 잘하는 지식정부의 건설, (5)디지털기술로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이라는 5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전자정부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인 추진결과로서 구축된 G4C(Government for=4 Citizen), OPEN(Online Procedure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 등은 높은 질과 편리성, 투명성 등에서 세계적인 호평을 얻고 있으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자정부정책의 발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정보화에 의하여 온라인 상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HRM;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e-사람)이다. 이 e-사람은 종래의 인사관리시스템인 PPSS(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을 확대/통합한 인사관리시스템으로 2010년말 현재 56개의 중앙행정기관, 약 26만명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약25만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사랑'과 약 47만명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사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사실상 공무원전체의 인사관리가 하나의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자인사시스템은 종전의 종이였던 인사카드를 전자적으로 처리가능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2)에 근거하여 구축된 것이다. 자세한 운용에 관해서는 표준적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과 인사정보의 책정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을 규정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무원의 전자적인 인사기록관리를 규정한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이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공무원 인사관리에 전자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NPM(New Public Management)등과 같은 신제도주의적 관리방법의 영향과 만성적인 과제로 지적되어온 비효율, 불투명한 인사관리 등 인사행정상의 각종문제에 대한 발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써 인사행정의 전자적처리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인사개혁8대 과제'에서는 인사업무의 효율화와 과학적인 인사정책의 지원이 요구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인사행정의 중요 과제로서 (1)섹션널리즘(활거주의)의 문제와 통합된 정보의 부족, (2)수작업으로 인한 작업의 번잡성과 비용, 비효율의 증가, (3)폐쇄적인 인사관리로 인한 부정부패의 발생, (4)각종 통계자료의 활용부족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인사관리에 관련한 약 30종의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행정안전부를 책임기관으로 하여 공무원의 일괄관리를 위한 제도개혁과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각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DB를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표준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적인 인사관리시스템으로서 '부서e-사람'을 보급시켰으며 그 위에

고급공무원의 인사정책지원을 위한 ‘중앙인사정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 내부시스템과 외부시스템으로 구성되는 e-사람은 내부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통합서버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 그리고 외부시스템으로서 국가인재DB, 공무원연금관리시스템 등 50개 기관의 DB와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미연결기관과의 연계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3. 일본의 전자정부정책과 인사급여종합시스템

일본의 전자정부(e-Government) 추진은 1994년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의 설치가 처음이며, 2000년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전략본부(IT전략본부)에서 논의되어 동년11월에 전자정부추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제정된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IT기본법)과 IT기본전략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인 e-Japan전략, 그리고 2009년 7월에는 i-Japan전략2015가 수립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2000년에 제정된 IT기본법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으로서 (1)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확대, 콘텐츠의 충실, 정보활용능력을 위한 학습의 종합적 추진, (2)세계최고수준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형성, 공정한 경쟁의 촉진, (3)국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전문인

재의 육성, (4)규제개혁,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촉진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 (5)전자정부의 추진, 행정의 간소화, 효율화, 투명성의 향상과 공공분야의 정보화추진, (6)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개인정보의 보호, (7)창조성있는 연구개발의 촉진, (8)국제적인 협조와 공헌(국제규격의 정비 등)을 규정하였다.

2003년에 각 성청정보화총괄책임자연락회의(CIO)에서 전자정부정책을 향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서 제시된 전자정부구축계획에서는 전자정부구축의 6대원칙으로서 (1)국민이 사용하기 쉬운 고도의 행정정보서비스의 제공, (2)정부정책에 관한 투명성의 확보와 책임(accountability)이행, 국민 참여의 확대, (3)누구든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보, (4)업무의 효율성확보, (5)민간부문의 활용, (6)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개인정보의 보호, (7)정부기관이외의 기관과 연계, 국제협력의 확보, (8)활력있는 사회형성에의 배려가 제시되었다.

한편 주요 정책면에서는 보면 2009년에는 ‘국민주역의 디지털사회/활력사회의 실현을 향하여’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i-Japan전략2015가 책정되었다. 2015년을 향한 주요 정책목표로서 (1)디지털기술이 공기나 물과 같이 받아들여져 경제사회전체를 포함(Digital Inclusion)하며 풍요한 생활의 질과 사람들의 연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2)디지털의 기술과 정보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와 혁신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정부와 건강, 교육, 인재를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관련되는 규제, 제도, 관행 등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은 각 성청에 의한 많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행정관리와 인사행정의 기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통의 과제로서 종래의 메인컴퓨터시스템인 레가시시스템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레가시시스템은 중앙정부의 각 성/청과 지방공공단체의 기본적인 정보시스템으로 과반수이상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유지비만으로도 연간 10억엔 이상의 경비를 필요로 하여 정보통신에 관련된 부문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과 행정조직에 있어 인사와 급여에 관한 업무로는 각 성/청이 실시하고 있는 채용, 인사이동, 퇴직, 징계, 승진과 승급에 따른 급여의 결정, 부양수당과 주택비보조, 통근수당, 단신부임수당의 신청과 인정, 급여의 지급(급여 계산, 기말/정근수당의 계산, 연말정산 등), 근무시간, 휴가, 인사/급여 관계의 조사, 공제조합의 조합원자격과 피부양자의 신고, 공제회납입비용의 공제 등에 관한 다양한 업무가 있으며 종래에는 필요에 따라서 업무처리에 관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정비하여 사용해왔다.

이 오래된 정보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로 막대한 유지비용의 발생과 부대적으로 늘어나는 소프트설비로 인하여 기술혁신과 업무개혁이 느려지고 있으며 COBOL등의 기술인력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어 인사/급여등관계업무/시스템최적화계획(최적화계획)이 2004년에 수립되었다.

2004년에 책정된 이 최적화계획은 결재 등의 사

무처리방법을 개선하며 인사관리와 급여관리 직원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와 신청처리가 단일화된 표준적인 인사/급여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1)인사/급여 등 업무의 간소화, 합리화, (2)시스템의 운용 등에 관한 전정부차원의 경비의 최소화, (3)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최적화계획은 비용대비 효과의 향상에 유념하여 (1)정보처리시스템의 통합단일화, (2)정보처리의 전산화와 자동화, (3)정보데이터의 종합적 재활용, (4)업무처리장치의 간소화, (5)안전과 신뢰의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연간 약 1,300만 시간의 업무처리시간 단축으로 약 20억엔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4. 인사행정의 정보화와 공무원의 수용도

행정관리의 기반인 인사행정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의 활용은 이미 잘 알려진 '보다 나은 정부'(Better Good Government)의 구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혁의 도구이다. 또한 행정활동에 있어서 정보화의 추진과 활용은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공무원의 정보화에 대한 수용도는 행정문화(Administrative Culture)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인사와 급여, 평가, 인사이동 등 인사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정보화에 관하



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식조사를 통해 인사행정 정보화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중국의 북경대학과 일본의 특별구공무원연구소,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 등의 협력을 얻어 한중일 지방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에 관한 의식조사(호세이대학 정책창조연구과 신용철 연구실)에서는 인사행정의 정보화의 현황과 정보화의 추진이 행정조직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전체적으로는 50.8% (508명)의 회답을 얻었다. 성별은 남348명, 여160명이며 경험연수는 5년미만(115명), 10년미만(89명), 15년미만(47명), 20년미만(69명), 25년미만(79

명), 그 외 100명이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372명, 중간관리직111명, 고급직10명이며, 478명이 지방공무원이었다.

### (1) 인사행정에 관한 만족도

인사행정에 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에서는 과반수의 공무원은 보통이라고 대답했으며 일본과 중국은 약30%, 한국은 20%미만이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였다. 또 불만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의 결과에서는 한국은 인사평가와 후생복지, 중국은 보수와 인사평가, 그리고 일본은 인사평가와 보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사행정의 불만족분야

| 구분         | 인사평가 | 보수  | 복리후생 | 인간관계 | 그외 |
|------------|------|-----|------|------|----|
| Japan(301) | 69   | 64  | 14   | 13   | 24 |
| China(93)  | 40   | 45  | 33   | 20   | 18 |
| Korea(114) | 33   | 11  | 16   | 2    | 1  |
| Total(508) | 142  | 120 | 63   | 35   | 43 |

### (2) 인사행정의 정보화추진에 관한 인지도

한중일 전자정부의 일환으로서 구축되고 있는 인사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인지도를 묻은 질문에서는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한중일 모두 전체의 10%이하였으며 과반수이상이 잘 모른다고 대답해 인사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행정의 정보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이유

로서는 이 정보화에 관한 연수(훈련)과 홍보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보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 분야의 연수(훈련)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결과로서 나타났다. 즉 전체의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약70%의 349명이 훈련(연수)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 (3) 인사기록(Personnel Record)의 공개

이번 의식조사에서는 공무원 인사기록의 공개여

〈표 2〉 인사행정시스템의 인지도

| 구분         | 잘알고있음 | 들어본적있음 | 잘 모름 |
|------------|-------|--------|------|
| Japan(301) | 28    | 79     | 183  |
| China(93)  | 3     | 42     | 48   |
| Korea(114) | 13    | 43     | 48   |
| Total(508) | 44    | 164    | 287  |

부와 인사기록의 보관형태, 권한 등에 관해서도 질문했으며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공개여부에 관해서는 한국과 중국/일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즉 한국은 약 70%에 해당하는 85명이 인사기록을 본적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중국은 약 80%(85명)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인사기록을 본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약 60%(236명)가 본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인사평가에 대한 불만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인사기록의 비공개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표 3〉 인사기록의 공개성(Q9)

| 구분         | 있음  | 없음  |
|------------|-----|-----|
| Japan(301) | 50  | 236 |
| China(93)  | 19  | 74  |
| Korea(114) | 85  | 29  |
| Total(508) | 154 | 339 |

(무응답이 있어 전체수와 일치하지 않음)

#### (4) 인사행정에 대한 정보화의 영향

인사행정 정보화의 추진이 공무원조직의 행정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의 결과에서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302명이 정보화의 추진과 행정문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같은 정도였다. 다만 한국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대답이 관계없다는 대답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정보화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또한 인사행정의 특정분야 중에서 정보화의 영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분야에 관한 질문의 결과(전체)에서는 승진/이동관리(163명), 공개성(154명), 인사평가(133명), 접근의 용이성(124명)이 순서였다. 다만 한국에서는 공개성(50명)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중국에서는 접근의 용이성(54명)과 공개성(51명)의 순이었고, 일본에서는 승진/이동관리(93명)와 인사평가(73명)의 순이었다.

### (5) 정보화의 추진과 민주화/효율화의 관계

한편 인사행정의 정보화가 행정조직의 민주성향상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257명이 기여하리라고 대답한 반면 약 40%가 기여하지 않을 것과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정보화와 민주화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인사행정의 정보화와 능률성의 관계에서는 전체의 약 70%가 행정조직의 능률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점은 한중일에서 공통적이었다.

〈표 4〉 인사행정의 정보화와 행정문화의 개선여부

| 구분         | 개선됨 | 변화없음 | 악화됨 |
|------------|-----|------|-----|
| Japan(301) | 40  | 183  | 40  |
| China(93)  | 14  | 57   | 17  |
| Korea(114) | 50  | 62   | 2   |
| Total(508) | 104 | 302  | 59  |

(무응답이 있어 전체수와 일치하지 않음)

〈표 5〉 인사행정의 정보화와 공무원조직의 민주화(Q16)

| 구분         | 크게기여함 | 기여함 | 변화없음 | 기여안함 | 잘모름 |
|------------|-------|-----|------|------|-----|
| Japan(301) | 3     | 29  | 72   | 69   | 104 |
| China(93)  | 1     | 37  | 37   | 8    | 10  |
| Korea(114) | 10    | 59  | 9    | 20   | 16  |
| Total(508) | 14    | 125 | 118  | 97   | 130 |

〈표 6〉 인사행정의 정보화와 공무원조직의 능률화(Q17)

| 구분         | 크게기여함 | 기여함 | 변화없음 | 기여안함 | 잘모름 |
|------------|-------|-----|------|------|-----|
| Japan(301) | 16    | 75  | 81   | 35   | 67  |
| China(93)  | 1     | 46  | 28   | 3    | 14  |
| Korea(114) | 10    | 67  | 4    | 20   | 13  |
| Total(508) | 27    | 188 | 113  | 58   | 94  |

### (6) 인사행정의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요소

인사행정의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질문한 결과는 예산조치(169명), 조직구성원의 이해(154명), 상사의 리더십(145명), 전문기술(139명)의 순이었다. 한국은 조직구성원의 이해가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대답한 반면 중국은 상

사의 리더십, 그리고 일본은 예산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인사행정의 정보화를 방해하는 요소에 관

한 질문에서는 한중일 모두 행정조직의 전통적인 관습/풍토가 가장 높았고 상사의 이해도 부족(한국/중국)과 예산조치(일본)의 순이었다.

〈표 7〉 인사행정의 정보화의 추진요소

| 구분        | Japan(301) | China(93) | Korea(114) | Total(508) |
|-----------|------------|-----------|------------|------------|
| 상사의 리더십   | 60         | 54        | 31         | 145        |
| 예산조치      | 112        | 44        | 13         | 169        |
| 인원증감      | 32         | 13        | 11         | 56         |
| 전문기술      | 80         | 43        | 16         | 139        |
| 조직구성원의 이해 | 89         | 14        | 51         | 154        |
| 노동조합의 이해  | 46         | 5         | 5          | 56         |
| 법적근거      | 33         | 44        | 13         | 90         |
| 선진정보      | 66         | 28        | 10         | 104        |
| 그외        | 8          | 3         | 2          | 13         |

〈표 8〉 인사행정의 정보화를 저해하는 요소

| 구분         | Japan(301) | China(93) | Korea(114) | Total(508) |
|------------|------------|-----------|------------|------------|
| 전통적인 관습/풍토 | 38         | 28        | 25         | 91         |
| 상사의 이해부족   | 9          | 25        | 10         | 44         |
| 법적근거의 부족   | 12         | 25        | 4          | 41         |
| 예산부족       | 28         | 9         | 8          | 45         |
| 기술력부족      | 16         | 9         | 2          | 27         |
| 그외         | 4          | 4         | 2          | 10         |

## 4. 맺으며

이 글의 중심테마는 인사행정 정보화의 현황에 관한 한중일의 비교연구이다. 동아시아의 주요국이며 전자정부의 구축을 국정과제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한중일에 있어서 인사행정의 정보화추진은 폐쇄적인 행정시스템(Closed system)을 개혁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사행정의 정보화추진이 행정조직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강화시켜 종전보다 유능한 정부활동을 가

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행정과 정부활동에 관한 정보화의 현대적인 의미는 바로 이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전자정부정책과 인사행정의 정보화에 관하여 현황을 고찰했고 한중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정보화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비교하였다.

먼저 전자정부의 추진과 인사행정 정보화의 상관성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 인사급여시스템의 추

진에서 보듯이 아주 밀접하며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 등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일관적인 정보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각성/청에 의한 분권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상호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일본의 정보화정책은 인사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과 같은 전략적인 분야에서도 기대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운영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의 운영원리인 민주성과 능률성을 통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즉 세계대전의 종료 후 추진된 일본의 전후개혁은 정부행정의 권력집중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미군정의 의도에 따라 능률성을 희생하면서도 행정의 민주성을 우선했기 때문이며 반대로 한국은 민주성을 희생하며 능률성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정부조직의 운용원리를 크게 좌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인사행정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한중일의 인식조사에서는 정보화의 정도는 기대보다도 낮은 상태였으며 그 원인은 정보화에 관한 훈련(연수)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는 인사기록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의 제한으로 인하여 인사행정의 정보화가 행정조직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인사행정 정보화추진에 관하여 한국은 낙관적인 반면 중국과 일본은 회의적이었으며, 한국과 중국은 행정조직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일본은 행정조직의 능률화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조직의 민주화수준이 반영된 결과로서 인사행정의 정보화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름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인 경향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연령과 직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행정문화와의 상관성과 정치와의 관계 등 포괄적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 참고문헌

- 고재학 『정보사회와 전자정부』 이담북스, 2009  
 권기현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 모형, 패러다임, 쟁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김성태 『신전자정부론』 법문사, 2007  
 임지봉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법제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  
 한국행정연구원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전략평가연구』 2007  
 한국행정연구원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전자행정서비스 활성화방안』 2002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1), 2010  
 행정안전부 『정보화통계집』 2010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2010  
 上村進 「電子政府の定義とパラダイムシフト」 『季刊行政管理研究』(通号131) 2010  
 (財)自治体國際化財団 「韓國における地方自治の情報化」 クレアレポート156, 1998  
 (財)自治体國際化財団 「各國の電子自治体の推進状況」(平成17年度海外比較調査)  
 人事院 「人事・給与関係業務情報システムに係るヘルプデスク支援業務調達仕上書(案)」 2009  
 人事院福祉局参事官室 「英國政府における人事給与システムの導入状況」 『人事院月報』 2010  
 島田達己 榎並利博 「Readers' Column 韓國電子政府 電子自治情報(前編/後編) : 日韓の比較を中心に」 『月刊LASDEC』 40(9)/(10), 2010  
 申龍徹 『韓國行政 自治入門』 公人社, 2007  
 總務省行政管理局 「韓國における電子政府の状況」 『行政&情報システム』(通号513) 2008  
 總務省HP(情報通信國際戰略局) [http://www.soumu.go.jp/menu\\_seisaku/ict/u-japan/index.html](http://www.soumu.go.jp/menu_seisaku/ict/u-japan/index.html)  
 中川弘文 「電子政府推進に向けて(4)業務 システム最適化の現状と今後の取り組み課題(現場における課題とITガバナンス強化に向けた考察)」 『行政&情報システム』(通号527) 2010  
 藤村吉則 「電子政府の問題点の類型化 : なぜ電子政府はうまく進まないのか」 『公共政策研究』(日本公共政策學會編, 第10号, 2010)  
 廉宗淳 「電子政府 電子自治 への戰略 : 行政改革を導く住民視点のIT行政の實現に向けて(韓國と日本)」 時事通信社出版局, 2009



충남마을기행

당진 푸레기마을



갯벌 체험과 약쑥 찜질로 유명한

## 당진 푸레기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 ● 풀잎 하나가 떨어져 만들어진 섬마을

왓지 이름만 들어도 친근하고 정겹게 느껴지는 마을이 충남 당진의 최서북단에 있다. 바로 푸레기 마을이다. 원래는 섬이었지만 80년대 대호방조제가 축조된 이후 연속되어 지금은 행정상 초락도리에 해당한다.

필자만큼이나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가 궁금해 하는 마을이름의 유래! 여러 의견이 분분하나 초락

도(草落島)는 풀잎 하나가 떨어져 섬을 이루었다는 전설이 가장 우세하다.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래가 가장 아름답고 이빠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푸레기는 지푸라기의 변형된 말로 해석된다.

당진IC에서 30분 정도 들어가면 도착하는 푸레기마을은 대호방조제 너머로 펼쳐진 서해바다와 대호만 호수, 삼봉저수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울창한 숲과 자연 송림이 잘 가꾸어져 있고 1



급수에만 산다는 가재가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해 태풍으로 쓰러진 송림은 아직도 복구가 안 되었다고 한다.

푸레기마을은 정부가 인증한 녹색농촌체험마을(2006)이자 팜스테이 지정마을(2009)이다. 현재 198가구, 820명의 적지 않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중 18%인 36가구가 마을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박 시설과 마을 특산물인 약썩을 재배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약썩작목반과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식당에서 단체손님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 갯벌체험과 약썩짬질로 유명세

필자가 찾아간 날은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원당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 갯벌체험과 견학활동을 하러 60여명이 방문했다. 알고 보니 이곳 푸레기마을 발전을 위해 1사1촌 협약을 맺고 등산로 정비, 마을봉사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체험객이 오기 전 미리 푸레기마을을 이끌고 계신 홍성직 추진위원장(64세)과 윤용숙 사무장(42세)을 만났다. 홍 위원장은 푸근한 인상에 차분한 말투로 필자를 편하게 맞아주셨고, 윤 사무장은 무척 활달하고 대화 내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아 필자도 덩달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분이셨다.

홍 위원장은 이곳 출신으로 이장직을 맡으시다 마을사업에까지 뛰어들게 되었다고 하시고, 윤 사무장은 성격답게 한 마디로 '시집 잘못와서...' 란다.

"처음 체험마을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건도 좋지 않았고 마을주민 간 갈등도 많았다. '그냥 편히 살수도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 등등... 하지만 오랜 세월 한 마을에서 얼굴 부비며 산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니 점차 문



〈푸레기마을 홍성직 위원장, 윤용숙 사무장, 당진화력본부 홍장길 홍보담당 - 오른쪽부터〉



〈푸레기마을을 방문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가족〉



〈원당초 3학년 허다원, 조서연, 동자영 양 - 왼쪽부터〉



제는 해결되었다.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말이다.”라고 홍 위원장은 그 당시를 전했다.

푸레기마을의 대표적인 체험으로는 사시사철 가능한 ‘갯벌체험’과 ‘항토 약썩찜질체험’이 있다. 이외 ‘달구지 햇빛촌 동물농장 견학’과 ‘전통음식체험’, ‘농산물 수확체험’ 등이 있다.

이중 ‘약썩’이 가장 유명한데, 연간 40톤을 수확해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 특히 약썩찜질방은 전국에서 연간 6천명 이상이



〈약썩으로 생산한 제품들〉



〈동물농장 안내표지판〉



〈동물농장에서 키우는 사슴〉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 현재는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2년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또한 이 약썩을 이용해 뜸, 좌욕, 약썩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고, 이를 상품화한 제품 판매를 통해서도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갯벌체험은 바지락 캐기가 주종인데, 자연 그대로의 갯벌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노력한 만큼의 양을 얻을 수 있다는 성취감과 남녀노소 모두 자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추천했다.

‘달구지 햇빛촌 동물농장’은 선생님 한 분이 퇴임 후 고향에 내려와 취미생활 하듯이 사부작사부작 시작한 것이 어느덧 마을주민과 방문객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감동을 주는 아담한 동물 농장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닭, 오리, 사슴, 개, 염소 등을 키우고 있었고 한견에는 작은 호수도 꾸며놓아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할 만 했다.

그리고 전통음식체험은 이곳에 귀농하신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청국장, 고추장, 된장, 들기름, 조식간장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시작한 체험으로, 특히 ‘청국장 쿠기’는 매우 호응이 좋다고 한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청국장과 쿠키의 만남에 굉장한 호기심을 보이고, 웰빙 퓨전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고 한다.

홍 위원장은 “당일코스도 인기가 있지만, 1박2일 혹은 2박3일 코스도 문의가 많다.”면서 “푸레기마을만의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지만, 주변 ‘영전마을’ 등과 연계해서 마을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 ● 달콤 짭조름한 갯벌체험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백문이 불여일견’, 본격적으로 ‘갯벌체험’에 나서보자.

갯벌체험을 위해서는 푸레기마을에서 약15분 정도 대호방조제를 지나 도비도해양체험관이 있는 바닷가까지 나가야 한다.

이 갯벌체험은 뭐니뭐니해도 윤 사무장의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압권이다. 드넓은 갯벌 안에서 단체 체험객을 통솔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였으나, 사무장의 목소리는 위원장이 확성기로 말하는 것보다 더 우렁찼다.





〈갯벌체험에 쓰일 호미와 장갑〉



〈갯벌체험에 앞서 안전교육〉



〈도비도해양체험관 갯벌로 이동〉



〈갯벌체험 현장 모습〉

이날 함께 온 당진화력본부 가족들에게 바지락을 캐 호미, 그리고 그물망과 장갑을 나눠준 뒤, 갯벌체험에 나섰다.

처음에는 다들 어떻게 캐는 건지 서투른 모습이었지만, 10여분이 지나자 누가 더 많이 캐나 내기라도 하듯이 갯벌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운 사무장은 “보통 갯벌체험은 오전 밀물 때를 맞춰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후 점심식사를 한다.”면서 “오후 일정은 주로 마을에서 약썩체험 등을 실시한다.”고 말해줬다.

말했듯이 바지락을 주로 캐지만, 굴도 나오고 운이 좋으면 낙지도 건질 수 있는데, 이날 체험객 모두 합쳐 낙지는 1마리만 잡혔다. 그것도 초등학교생이.

필자는 언제부터였는지 미리 갯벌에 와서 바지락과 굴을 캐고 있는 할머니 한분께 다가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입가에 살짝 웃음을 보이시며 갯벌에서 갓 캔 굴을 저에게 먹어보라고 권하셨다. 사실은 옆에서 계속 입맛을 다시며 침을 삼켰던게다. 제가 보낸 무언의 텔레파시에 할머니는 그렇게 되받아주셨다. 그나저나 그



〈삶의 현장인 갯벌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의 모습〉

굴맛은 필자가 그동안 먹어본 그 어떤 굴보다 정말 맛있고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바다의 맛이 있다면 바로 이 맛이 아닐까 생각했다.

필자가 할머니에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여쭙자 ‘식구들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물 빠졌을 때만 일하니깐 괜찮다.’ 고 하신다. 그리고 보니 갯벌에는 체험에 참가한 일행 이외에 할머니들의 모습이 많았다.

필자는 순간 이곳이 체험객 놀이터가 아닌 ‘체험 삶의 현장’이란 생각이 들었다. 갯벌에 바닷물이 들이차야만 허리를 펴시는 할머니의 농장 말이다. 솔직히 체험객을 향한 카메라렌즈보다 이곳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것이 더 따뜻하고 진솔했다.

모든 갯벌체험을 마치고 나온 체험객들의 손에는 그물망 한 가득 바

지락이 가득했고, 마치 만선(?)의 기쁨을 자랑이라도 하듯 모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필자는 점심식사 후 체험객 일정(당진전력문화홍보관 견학)과는 별도로 다시 마을에 들어왔다. 차를 타고 마을을 둘러볼 참이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풍경은 내수면의 아름다운 습지와 갈대밭이었다.

푸레기마을을 빙 둘러싼 길은 봄이 되면 벚꽃으로 만발하고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인 산책로가 된다.



〈푸레기마을 종합안내도〉

## 푸레기마을의 밝은 미래 그리고...

홍 위원장은 “앞으로 마을길을 이용한 저전거길을 조성해 방문객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이야기가 있는 우리 마을을 둘러보게 할 참이고 또 앞으로 호안방조제 내수면에 선착장을 만들어 배를 타고 자연생태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 대표 전통주인 ‘송순주’를 당진의 대표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 송순주를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2009년부터 찹쌀과 송순(소나무 애기잎)을 이용해 빚어온 민속주로서, 원활한 생산을 위해 소나무 2천 그루를 따로 심었을 정도, 역시나 원료의 원활한 공급이 관건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장 정비를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2012년부터 재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란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윤 사무장이 질세라 거든다. “지금 충남의 팜스테이 지정마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체험마을 소개 앱을 개발 중”이라면서 “기존의 대외 홍보나 입소문을 넘어선 더 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푸레기마을에 다녀간 체험객은 약 1천5백명, 1천만원 정도의 소득창출이 있었다고 한다.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윤 사무장은 “아직은 마을의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농가만 참여하고 있기



〈호안방조제 내수면〉



〈송순주 제조공장〉



〈마을 체험용 자전거〉



때문에 그 소득창출이 일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 이라면서도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와 함께 고향의 정을 나누고 동참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소신을 밝혔다.(그러면서 마지막 한 마디 보탠다... 나 말 너무 잘 하죠~ 호호호)

푸레기마을은 예로부터 비옥한 농토와 쾌적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개발과 보존이란 두 갈래 길에 있는 듯 보였다. 어찌보면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마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말했다. 여기저기서 마을사업 해보겠다고 나서지만, 정작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마을 주민의 행복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다시 말해 마을 주민의 행복한 웃



〈푸레기마을의 비옥한 농토〉

음과 넉넉한 인심 때문에 체험객이 꾸준히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곳 푸레기마을은 안심이다. 일단 윤 사무장의 밝은 웃음과 활기찬 목소리가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위에 홍 위원장의 온화함과 죽이 잘 맞아 마을 주민과 함께, 그리고 같이 잘 꾸려나갈 것을 믿는다.

## [푸레기마을 패키지 여행]

### ● 찾아가는 길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당진행 시외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 가면 당진터미널에 도착 후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초락도행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지방에서는 당진행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로 나와야 한다. 대호방조제 방향으로 오다가 삼봉사거리에서 초락도 이정표를 보고 가면 된다.(당진IC에서 약30분 소요)

▶ 주소 :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463-3번지(T.041-353-500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puregi.com](http://www.puregi.com)

### ● 왜목마을

해가 뜨고 지는 마을, 바로 왜목마을이다. 서해안에서 바다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 특히 마을의 뒷산격인 석문산(79m)은 일출과 일몰의 중요한 포인트!

'열린충남'이 발간되는 시기에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 해돋이축제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발길을 찾는다.(12.31~1.1)

▶ 찾아가는 길 :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상행) 혹은 송악C(하행)로 빠져나가 대호방조제 방향으로 약30분 소요

▶ 인터넷 홈페이지 : [www.waemok.org](http://www.waemok.org)



# 행복도시의 성공적 추진 전략과 비전

송기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1. 추진 배경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현재 49.1%에 이르는데, UN은 이러한 수치가 세계 4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UN Report, 2007). OECD에서도 대도시권이 인구 6백만 내지 7백만을 넘어서게 되면 집적으로 인한 효율보다 혼잡과 오염 등으로 인한 비경제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서울은 세계에서 86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Mercer, 2008).

이러한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바뀌게 되었고, 새 정부에서는 2010년 수정안을 추진하였고 국회에서 같은 해 6월에 이를 부결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현재 36개 정부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을 이전함으로써 행정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원안대로 건설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다.

## 2. 추진 현황

### 1) 사업비 집행 현황

행복도시 건설사업에는 공공부문에서 22조5천억원이 소요된다(정부: 8조5천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4조원). 2005년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되었으며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을 거쳐 2007년 7월에 건설사업이 착공되었는데, 2011년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의 33%에 해당하는 7조5천억원이 집행되었다.

## 2) 주요 공사 진행 현황

**중앙행정기관** : 행정기관은 입주시기에 맞게 단계별로 건설 중에 있는데 총리실이 들어서는 1단계 1구역은 현재 마감공사를 진행 중이며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등이 입주하는 1단계 2구역은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나 문화관광체육부 등이 들어서는 2단계는 지난해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국세청이나 법제처 등이 입주하는 3단계는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다.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첫마을** : 2,242세대가 입주하는 첫마을 1단계는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되어 지난해 11월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며 12월 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4,278세대의 첫마을 2단계는 올해 6월에 입주가 시작되고, 현재 87%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광역교통** : 전국적인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립된 행정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바탕으로 13개 광역도로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행정도시~대전유성 연결도로는 '11년 12월, 행정도시~고속철도 오송역 연결도로는 '12년 6월, 행정도시~정안IC 연결도로는 '12년 12월 개통예정이다. 또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11년 9월에 착공하여 '14년까지 완료하고 청원IC 연결도로와 청주시 연결도로는 금년 중에 착공하여 '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가 완료된 오송~청주 연결도로와 공주시 연결도로는 '12년 착공하여 '17년까지, 조치원 연결도로 및 청주공항 연결도로는 '12년에 설계에 착수하여 '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첫마을 1단계〉



〈첫마을 2단계〉

그 외에도 오송~조치원, 부강역, 공주시 연결도로(추가구간)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11년 11월)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3) 주택공급 및 토지분양 현황

행복도시에서는 퍼스트프라임, 더샵, 푸르지오, 스타클래스 등 현재까지 10,981호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건설청은 지난 10월에 이주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린 바 있다. 현재까지 주택마련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33% 가량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4년 말까지 총 3만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분양에 대해서는 '11.10.31 현재 가처분면적 2,630만㎡(전체 7,290만㎡) 가운데 445만㎡(가처분면적의 16.9%)가 분양되었다. 가처분면적의 54.4%인 1,107만㎡ 차지하는 공동주택용지는 현재 143만㎡이 분양되었고, 공공청사 61만6천㎡, 상업업무 9만6천㎡, 문화시설 5만8천㎡ 및 복지시설 1만5천㎡이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 3. 현 시점의 진단과 분위기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토지분양률은 57%('11.9.26 기준으로 분양대상토지 2천736



만2천㎡ 중에 1천576만2천㎡가 분양)임을 감안할 경우, 행복도시는 16.9%(11.10.31 기준)가 분양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2015년까지 인구 15만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정안 논란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난 등의 이유로 행복도시의 개발 속도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기관 이전 고시(2010년 8월), 첫마을 분양(10월), 세종시설치법 통과(12월) 및 과학벨트 입지결정(2011년 5월) 등을 거치면서 행복도시 건설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초기 계약률이 95%를 상회하는 등 행복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만연해 있고, 일반인의 방문이나 투자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4. 행복도시의 성공 전략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은 특별법 제6조에 복합형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해 건설청은 세계적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7가지 도시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환상형 도시구조 채택, 통합디자인 구현, Smart City 건설, 세계적 교육환경 조성, 친인간적 정주여건 마련, 한국성 추구 및 우수한 교통체계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1) 입주민의 초기 정착 지원

사람들이 행복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느냐가 행복도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고 보면 입주민들이 행복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청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출범준비단 등과 협력하여 미래형 학교 건설, 3개 특목고 설치 및 우수 교사 유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 입주민들이 문화·예술공간 부족으로 불만이 많았으나, 행복도시는 초기부터 국립도서관·대통령기록관·아트센터 등을 도입한다. 이 뿐만 아니라 대형판매시설과 편의시설의 조기 입주를 유도하여 의류 구입, 장보기 및 외식이나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2)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총리실을 비롯한 36개 기관(10,452명)과 KDI 등 16개 국책연구기관(3,533명)이 행복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라 할 수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행복도시에서 살게 되므로 이들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공모를 통해 디자인이 결정된 정부청사 건물은 전체를 덮는 옥상정원과 도로·하천을 넘나드는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주변의 상업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통근하고 때때로 휴식하고 외부시설을 이용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 3) 도시경쟁력 향상

시민들에게는 ‘살고 싶게’, 공무원·연구원들에게는 ‘쾌적하게’라면 도시 전체로는 ‘경쟁력 있게’ 행복도시가 만들어져야 한다. 도시경쟁력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뤄지는데,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기회가 도시경쟁력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본다면 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의 추이를 살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연구소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법제화 등도 필요하다.

## 4) 과학벨트 연계

지난해 5월 과학벨트 입지결정 이후에 최근에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행복도시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국제적인 정주환경이나 연구소·기업 등의 유치에 있어서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면적에 있어 행복도시는 72km<sup>2</sup>이므로 과학벨트 거점지구 3.7km<sup>2</sup>의 20배에 해당한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비 규모에 있어서도 행복도시가 22조 5천억 원이므로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2조원보다 훨씬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행복도시에서 과학벨트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행복도시가 행정기능 뿐만 아니라 과학으로 특화된 도시개발을 지향한다면 행복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아울러 대전·세종·청원·천안 등 과학과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과학벨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으로 확신한다.





## 5. 행복도시의 비전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과 삶의 질을 등한시 하면서 도시를 개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간의 국토개발전략이 ‘양과 집중’에 매몰되었다면 행복도시는 ‘삶의 질과 균형’을 추구하는 개발전략의 일대 전환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도시는 강과 공원이 잘 어우러져 자연을 만끽하며 도서관·미술관·공연장 등이 풍부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이웃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삶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우수 교육기관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과학·문화·행정 등 여러 분야의 일꾼들이 그들의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행복도시였으면 한다. 삶터를 제공하는 명품도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건인하는 혁신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조선족 추장(?)의 중국 배낭여행기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인성 | 중국 절강대학 교수

중국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와 소득 증대,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라 중국 여행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중국 관광 그린북>에 따르면 중국 여행객 수는 연평균 11.7% 증가하여 21억 명을 돌파했고, 관광 수입도 연평균 18.9% 증가해 1조 2,600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관광국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2007년 71위에서 2010년에 39위로 성장하였고, UN 세계관광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4대 해외관광시장이자 아시아 최대 해외관광 자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관광시장'으로 부상하여 세계 관광시장의 8%를 점유하고, 2020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1).

이러한 중국의 여행지 중에서 중국의 전문여행서적에서 추천하고 있는 중국외 관광명소 중 20대 명승지에 속하는 광서 계림, 호남 장가계, 안휘 황산, 절강 항주, 북경, 내몽고 호트, 백두산 등을 배낭여행을 떠나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 I. 계림산수갑천하(桂林山水甲天下)에서 여행 첫발

### 1. 중국의 첫 방문지, 산수(山水)가 아름다운 계림(桂林)

중국 여행의 첫발을 2011년 6월 29일에 '계림산수갑천하(桂林山水甲天下)'로 알려진 계림에 도

착하였다. 계림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는 중국이 1992년 8월에 한국과 수교를 하고, 관광을 개방하였을 때 1993년에 계림 도화강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맨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행지로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계림(桂林, Guilin)이라는 지명은 예로부터 계수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계수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이라는 뜻이다. 계림은 ‘계림의 산수는 천하제일이다’라는 명성을 들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지 중의 하나이다. 빼어난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예로부터 시인과 화가들의 글과 그림의 소재가 되어왔던 곳이다. 계림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이한 36,000개의 봉우리들 때문에 특별히 가볼 만한 곳을 정해놓지 않아도 좋다. 환상적인 중유동굴 노적암과 천하제일 리강 유람, 계림 시내의 자금산 독수봉, 칠성암공원, 상비산, 첩채산, 복파산 등이 유명관광지이다.

## 2. 양제(陽堤)와 양삭(陽朔)에서의 민박과 리강 유람

계림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답게 숙박비가 만만치 않았다. 때문에 장기간의 배낭여행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계림시내에서 하루만 자고 계림역 광장에서 출발하는 양삭행 시외버스를 타고 중저가 숙소를 찾아 출발하였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중간에 버스를 내리게 되었다. 이유는 버스안에서 만난 한 중국 새댁이 양삭에 가면 여행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계림 시내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숙박비가 비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경치가 아름답고, 조용하면 서도, 양삭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최근에 현대시설로 지은 펜션형 민박이 양제라는 곳에 있으니 그곳에서 체류할 것을 권유하였다.

처음에는 민박을 안내하는 호객사원으로 생각하고 찻찻해 하다가 순박한 모습에 이끌려 중간에서 버스를 내렸다. 이 사람은 양제 리강변의 펜션을 소개해 주었는데, 하루에 100위안하는 숙소였다. 리강변의 절경이 한눈에 보이고, 에어컨과 화장실, 나무침대가 갖추어진 원룸형 방이었다. 한국 유명 관광명소의 펜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중국의 관광개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제에 숙소를 정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민박을 안내해준 사람은 호객사원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면서 살림을 하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동네의 젊은 새댁이었다. 이 후 민박이외에도 동네 식당과 시골장터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도 보여주면서 자기 집에서 홈스테이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집은 전통적인 흙집에 부엌에는 골동품 물동이가 있고, 거실에서 닭을 키우고 있어 전통적인 장족 원주민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양제에 머물면서는 민박을 소개해준 새댁의 남편이 운영하는 유람선으로 계림관광의 백미인 리강을 유람하였다. 이른 새벽에 어둠을 헤치고 리강의 첫 물길을 가르며 계림에서도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양삭까지 배를 타고 왕복하였다. 끝날 것 같지 않게 이어지는 강줄기와 그 강물을 막고 선 봉우리 앞에 간간이 나타나는 작은 강변마을, 가마우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강촌 어부들, 강변의 초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물소떼, 벌거벗고 먹을 감다가 유람선을 보면 손을 흔드는 아이들, 곳곳의 작은 계곡에서 리강으로 쏟아지는 하얀 물줄기들……. 그림처럼 펼쳐지는 풍경에 한동안 넋을 잃고 있자니 어느새 아침 동녘이 밝았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장관이었고, 나의 머릿속에 영원한 영상으로 기억이 되었다.

양제의 민박에서 3일간을 머물고 나서는 계림 유명관광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양삭을 찾았다. 양삭에서는 여관급 숙소를 선택하여 민박보다 두 배 요금으로 체류하며, 양삭의 관광거리와 리강의 자연경관, 역사유적들을 배낭을 메고 걸어서 여행을 하였다. 원래 양삭의 여행은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관광객이 많은데, 여름철에 너무 더운 탓에 자전거 여행보다는 걸어서 양삭의 구석구석을 다녔다. 양삭의 서관광거리에서는 계림여행을 기념하여 도자기 목걸이와 홍목 다도용기 등 몇 가지의 공예품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양삭 여행의 추억을 도자기 목걸이에 담아 걸고 중국여행의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 II. 장가계와 황산에서 만난 중국 명산

### 1. 봉우리 삼천에 팔백개 물줄기가 장관인 장가계(張家界)

장가계는 무릉원(武陵園)에 속하며 입장료는 245위안<sup>1)</sup>이다. 유네스코는 1992년에 이곳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였고, 중국인들도 계림·구채구·황산과 함께 최고의 경치로 사랑하는 여행지이다. 장가계는 예로부터 ‘봉우리 삼천개에 팔백 물줄기(峰三千 水八百)’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별유천지 비인간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라 전하고 있다.

수천개 봉우리가 기묘하게 어울린 장가계는 보는 곳마다 한폭의 산수화지만 그 중에서도 남천 일주(南天一柱)가 우뚝 솟아있는 황석채(黃石寨), 햇살 받은 물결이 금빛으로 일렁이며 세상시를 잊게 하는 무릉도원 금편계(金鞭溪), 회오리 모양이 기암괴봉이 줄지어 늘어선 황사채(黃獅寨), 깎아지른 절벽 꼭대기에 한가로이 걸쳐진 천하제일교(天下第一橋)가 볼 만한 사도구(沙刀溝), 기묘한 봉우리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조천관(朝天觀) 등을 2일 동안에 등산하였다.

장가계는 최근 영화 ‘아바타’의 배경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급격하게 개발되었고, 한국관광객이 매년 30%이상 방문하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여행사의 안내가 당초 계약과 달리 여행일정을 반나절 남기고 취소한 점을 제외한다면 중국 산수화의 원본을 만난 감동을 주는 여행지였다.

### 2. 8시간 빙속 하산, 산중에 산 황산(黃山)

장가계에 이어 황산으로 가려는데, 여름 성수기라 장가계행 기차표가 없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황산에 인접한 응담(鷹潭)까지 가는 기차표 326위안짜리 침대아래칸<sup>2)</sup>을 구해주어 새벽 1시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황산까지는 다시 5시간 정도 다른 기차로 가야하는데 여기에서도 기차표가 없었다. 그런데 같은 침대칸에 같이 승차했던 중국 젊은 친구들의 도움

1) 장가계 입장요금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245위안으로 한화 47,000원 정도임.

2) 중국기차의 침대실은 4칸침대, 6칸침대가 있는데, 6칸침대는 상·중·하칸이 있어 각 칸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으로 입석표를 간신히 구해 무사히 황산에 도착하였다.

황산역에 이른 아침에 도착해서는 장가계 여행패키지상품의 실패를 교훈삼아 개인배낭여행을 위해 안내지도를 구입하였다. 그리고는 버스편으로 황산입구의 탕구에 도착하여 한국식당을 찾아 오랜만에 한국음식으로 된 장찌개를 먹으며 황산의 여행정보를 수집하였다.

황산은 중국의 최고 명산으로 5악 즉, 태산, 화산, 숭산, 형산, 향산보다 월등히 아름다워 '황산에 한번 오르면 다른 산은 찾지 않게 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황산은 최고봉인 연화봉, 천도봉을 축으로 72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황산에서 특히 유명한 것이 소나무(奇松), 바위(怪石), 구름(雲海), 온천(溫泉), 겨울눈(冬雪)으로, 이 다섯 가지가 동양화처럼 펼쳐져 '황산오절(黃山五絕)'이라 일컫는다.

황산의 등산은 탕구를 출발하여 운곡사, 백아령, 시신봉, 북해빈관, 청량대, 배운정, 서해대협곡, 비래석, 연화봉, 영객송, 천도봉, 자광각을 거쳐 하산을 하였다. 등산을 하다보면 황산이 오래전 바다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황산의 운해를 의미하여 전해(前海), 천해(天海), 서해(西海), 동해(東海), 북해(北海) 등 다섯 개의 바다로 나누고 있는데, 등산을 하면서 이들 운해의 절경을 감상하였다.

황산의 정상을 등반한 후 하산하면서 광명정에서 만난 여름비와 일선천의 좁은 등산로 구간은 여름 관광성수기의 여행인파가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케이블카 탑승 2km를 남겨두고 8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내린 소나기가 만들어내는 기암절벽의 폭포수는 선경(仙境)을 연출하여 등산과 하산을 기다리며 생겨난 피로감을 잊게 해 주었다. 앞의 일정에 여행을 한 장가계는 여성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 산이었다면, 황산은 남성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산이었다.



장가계 입구

장가계 입장권



장가계 봉우리숲

장가계 모자상



장가계 저팔계상

아바타 촬영지



장가계 케이블카

심리화랑 관람차



장가계 심리화랑

아바타촬영 광고



황산 운곡사매표소

황산 백아령 전경



황산 시신봉 전경

황산 배운정 전경



서해대협곡 앞 전경

황산 연약자물쇠



백보운제 정체인파

연화봉 전경

### Ⅲ. 항주 서호유람과 북경 천안문 국기게양식의 단상

#### 1. 걸어서 3일 서호일주, 연중 아름다운 항주

황산을 떠나 절강성의 성도 항주는 버스여행을 하였다. 항주에 저녁 때쯤 도착하여 절강대학의 초대소에서 머물기 위하여 일전에 장기 체류를 했던 곳을 찾았더니 수리중이었다. 더구나 대학에



서 운영하는 호텔도 쑤단위의 대형 행사로 방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근처의 체인호텔인 루지아(如家)을 찾아 회원가입을 하여 간신히 방을 구하고, 다음날부터 항주시내와 서호유람을 시작하였다. 항주는 서호와 악왕묘, 영은사, 육화탑, 용정, 징항운하 등의 유명관광지가 있다. 계림·장가계·황산에서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강과 산을 찾는 여행을 했기 때문에 항주여행은 버스와 도보로 다니면서 호수와 역사문화유적을 찾는 도시관광을 하였다.

항주의 볼거리는 서호 근처에 몰려있고, 그 주변의 거리가 항주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다. 서호의 둘레는 약 15km 정도이다. 고목에 얹은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나절,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서호 주변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노부부의 모습에서부터 저녁나절 낙조를 즐기며 노닐 젊은 연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 더욱 멋졌다. 특히, ‘서호 10경(西湖十景)’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주변의 경치와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연분홍빛 연꽃이 아름다운 곡원풍하(曲院風荷)로부터 서호에 비쳐지는 일몰이 아름다운 뇌봉석조(雷峰夕照)까지 10경 모두를 3일 동안 걸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항주를 떠나면서는 관광기념으로 청석으로 된 낙관목걸이와 옥팔찌를 구입하였다.

## 2. 매일 새벽 구름때 관광객, 천안문 국기계양식

항주(杭州)를 떠나 다음 여행지인 내몽고로 가기 위하여 북경으로 향했다. 항주에서 북경까지



일반 철도로는 1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중국 고속철도로 6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다.

북경남역에서 내몽고행 기차표를 사기 위해 북경서역으로 가서 10시 37분에 내몽고 호화호특으로 출발하는 기차표를 사고 새벽과 아침시간을 북경에서 보내야 했다. 어딘가 숙소를 찾아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그런데, 언젠가 천안문광장 국기계양식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정보를 접한 기억이나 천안문광장으로 달려가 잠깐 진행되는 국기계양식을 관람하였다. 이날 운집한 관광객들이 8만여명 쯤되며, 매일 이 정도 인파가 모인다고 관광객들을 통제하던 공안이 알려주었다.

북경의 천안문광장은 북경의 얼굴로 중국 근대사의 상징적인 곳이다. 1919년의 5·4운동, 1966년 문화대혁명, 1989년의 민주화 시위가 이곳에서 벌어졌다. 과거에는 이렇게 집회장소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다. 천안문광장에 들어서면 인민영웅기념비, 인민대회당, 혁명박물관, 역사박물관, 모택동 기념관 등의 외관을 볼 수가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천안문 뒤쪽에는 자금성이 있다. 아주 짧은 시간의 천안문 광장의 국기계양식 관람은 이번 여행에서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인상을 심어주었다.

## IV. 내몽고의 초원과 사막에서 특이여행

### 1. 끝없는 초원, 사람과 말이 함께 생활하는 호화호특(呼和浩特)

북경서역에서 내몽고자치구의 성도인 호화호특으로 10시 37분에 출발하는 열차가 지연되었다. 12시가 다되도록 출발시간이 안나오길래 기차여행의 또 다른 재미인 찐계란을 사먹다 기차를 놓칠뻔한 사건을 뒤로하고, 밤새 기차로 달려 이튿날 도착하였다. 기차에서 첫발을 내딛으니 푸른





서호 일몰

서호 버드나무길

서호 정자

서호 연꽃

천안문 국기게양식

국기게양식 인파1

국기게양식 인파2

하늘과 맑은 공기가 다가왔다. 도착 후 여행가이드가 안내를 해준 숙소를 찾았다. 숙소는 기차역 앞에 슬럼가 형태의 골목안에 있어 불안해 하니 다른 숙소를 구해주었다. 시내 대로변의 3성급 호텔은 성수기인 관계로 하나 남은 방을 평소가격보다 좀 비싸게 간신히 구해서 하루를 머물고, 다음날 바로 오탑사, 왕소군묘 등이 있는 시내여행을 뒤로하고 초원여행을 시작하였다.

초원여행은 우리 일행 이외에도 대련에 유학을 와서 여행을 떠난 유학생 두 명이 합류를 하여 일행이 되었다. 시내에서 초원까지는 3시간 쯤 걸렸다. 초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락(馬乳酒)을 마시고, 몽고식 환영의식이 있었다. 그리고는 바로 옵션 상품인듯한 말타기 체험을 권유하여 말을 타고 약 2km 정도 떨어진 초원에 있는 몽고족 켈(이동식 천막집)을 방문하여 마유(馬乳)로 만든 비스킷과 치즈, 전통차를 마시고 돌아왔다. 나중에 유학생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몽고에서 말 한 마리 가격은 1,500위안이라 하였다. 그런데, 한 명에 350위안씩에 1시간 정도의 체험을 하다니 매우 비싼체험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광활한 초원에서 말타기 체험을 하기는 내몽고의 초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의 값으로 위안을 삼았다. 저녁시간 전에는 초원에서 펼쳐지는 몽고씨름과 말경주를 관람하였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전에는 식당 옆 기념품 가게에서 랑아목걸이와 동물뼈로 만든 팔찌를 구입하고, 식사는 양을 통째로 구운 몽고의 양다리 전통요리를 별도로 구입해서 아이락을 곁들여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씻었다. 그리고는 몽골의 깜깜한 밤에 피어오르는 초원여행자들이 펼치는 캠프ไฟ어의 불빛을 뒤로하고, 내몽고 초원의 밤하늘에 수놓은 은하수 길을 걸으며 몽고족 켈의 숙소에서 사람과 말이 함께 생활하는 내몽고에서 신비한 밤을 보내었다.

## 2. 고속도로 역주행 8시간만에 도착한 사막여행은 취소

내몽고 초원에서 꿈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새벽에 일어나 끝이 없이 펼쳐진 목장의 초원을 산책하였다. 아침은 어제 먹은 아이락(馬乳酒)의 숙취해소로 우리의 해장국처럼 매콤하게 끓여낸 양내장탕으로 아침을 먹고 사막여행을 출발하였다. 사막여행을 하러 가던 중 우리일행에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들에게는 사전에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사막으로 가는 다른 여행가이드에게 넘겨져 여행가방과 함께 인수인계가 되었다. 그리고는 두시간쯤 가서 동물원이 있는 어느 시골의 버스정류소에 몇몇 중국관광객들과 함께 내려져 다른 차로 갈아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시간 쯤 기다렸는데 승용차 한 대가 와서 우리를 태우고 사막으로 향하였다. 일행 중 중국어를 하는 유학생에 의하면 우리를 태우러 올 예정인 관광버스는 차가 막혀 언제 올지 몰라 우리는 외국

인이라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임시차를 임대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임시로 대체된 승용차로 사막여행지로 가던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창밖의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하며 가다가 또 다시 이색적인 경험을 하였다. 여름 성수기라 그런지 앞에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 앞에 가던 차들은 주차장처럼 그냥 서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의 갓길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주행선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들을 맞이하며 앞자리에 앉아 있던 나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동안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렇게 8시간만에 도착한 사막여행은 그 동안의 여행과는 달리 고난의 연속이었다.

마침내 사막여행지라고 도착한 목적지는 또 다른 황당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막여행지는 진짜로 사막이 아니라 내몽고 한 지방도시에 인접한 대규모 모래언덕을 사막여행지 형태의 테마파크로 조성한 곳이었다. 관광객들로 하여금 모래뒀신과 발토시, 장갑, 모래방지머플러 등과 낙타, 오프로드용 지프차, 모래썰매, 단체관광용 장갑차 등을 이용하는 비용을 1인당 무조건 200~300위안 정도를 내야 입장을 할 수 있었다. 광활한 사막의 모래언덕과 오아시스를 기대하고 찾았던 사막여행은 상술로 무장된 알뜰한 장사숙 때문에 더 이상의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서고야 말았다.



## V. 백두산과 해란강가 일송정에서 바라본 용정의 감회

### 1. 人山人海, 여기가 줄서서 기다려 관람하는 백두산 天池

내몽고에서는 이색적이고 황당했던 여행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북경과 장춘을 거쳐 민족의 정기가 어려 있는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북경에서 장춘을 가는 기차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성수기여서 도저히 차표를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암표를 사게 되었다.

중국과 북한 국경에 있는 백두산은 중국에서는 장백산(長白山)이라고도 부른다. 백두산은 중국 최대의 자연보호구로 삼림이 울창해 멸종 위기에 처한 각종 식물과 동물의 보고이다. 하늘을 향해 쪽쪽 뿜은 아름다리 미인송은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며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치게 한다.



내몽고 초원전경    몽고궐 숙소    몽고식 전통씨름    말타기 묘기    양고기 몽고요리    고속도로 갓길역주행    사막여행 체험차

반면, 백두산은 언제까지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미 오래 전부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천지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여기저기 만들어진 돌계단이나 도로는 반갑지가 않다. 해발 2,749m인 정상 바로 턱밑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어서 등산의 묘미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지난 1996년에도 올랐던 백두산 천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고 있으며, 오르내리는 지프차를 기다리는 시간만도 2시간씩을 기다려야 했다. 도시의 유원지처럼 줄을 서서 관람을 해야 하는 천지를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돌아보고 내려와 백두산 온천을 거쳐 장백폭포에 물보라의 장관을 내 마음의 화폭에 담았다.

백두산을 여행하고 난 후 연길에 머물면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무역의 관문인 도문을 찾았다. 북한으로 가는 두만강 다리는 입장료 20위안을 내고 북한과 가까운 다리 중간까지 걸어가 보며, 다른 곳에서는 없었던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도문은 최근 무역과 관광도시로 많은 관광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돌아오는 길에 들러본 안도현은 고려 인삼의 본고장인 금산과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많은 인삼제품들이 관광특산물로 판매되고 있어 우리지역과는 경쟁관계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2. 해란강변 일송정의 선구자, 윤동주의 ‘서시’ 碑에서 옛날의 희망을 찾아

백두산을 오르고 난 후 용정을 찾았다. 용정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가곡 ‘선구자’의 배경인 해란강가의 일송정과 윤동주의 서시가 있는 용정 대성중학교, 지금의 용정중학교를 방문하였다. 먼저, 해란강가의 일송정이 있는 비암산을 올랐다. 비암산의 옆으로는 해란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일송정은 비암산의 산 중턱의 봉우리에 있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노송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과는 달리 일송정 소나무는 너무 왜소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인이 건립했다는 일송정휴게소는 폐허로 변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일송정에는 가곡 선구자의 배경지가 궁금하여 찾아오는 한국 관광객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방문을 하고 있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는 노래속의 이상향과는 매우 다른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해란강변 일송정을 일으킬 수 있는 선구자는 없는 것일까?

일송정이 있는 비암산에서 내려와 용정시내를 걸으며, 윤동주의 시비가 있는 용정중학교의 교정을 찾았다. 관광객들은 한사람도 없었고, 학교 운동장과 시설도 현대식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어 황량한 느낌과 함께 적막감마저 들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운동장 옆에 시비에 있는 ‘서시’를 읽으며, 어두웠던 현실 속에서 고뇌를 통해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갈망하던 불굴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 Ⅵ. 청도행 기차를 탄 조선족 추장(?)

### 1. 32시간 기차여행, 기차안 중국인들이 조선족 추장이냐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여행하고, 다음 목적지는 한국에 한국과 인접해 있는 중국 동해의 관광도시 청도를 향하였다. 연길에서 청도로 가는 기차표를 구해보니 침대칸을 없고, 좌석표만 있어서 이를 타고 청도로 출발하였다. 승객들은 장시간을 청도까지 가면서 비좁은 좌석에 앉아서 각자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과 음료, 과일, 과자 등을 먹으면서 서로가 살아가는 얘기를 하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도 이들 틈에 승객으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차안에 여행을 하던 중국사람들이 저가의 좌석입석표로 외국인이 여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는지 한국의 돈과 신분증, 음식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서로가 대화를 하고 가던 중 내가 그 동안에 각 도시에서 관광기념품으로 샀던 각종 목걸이와 팔찌 등을 걸고, 수영까지 깎지 않고 피부가 새까맣게 탄 모습을 보고 혹시 '당신은 조선족 추장' 이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기차안에 한바탕의 웃음이 일어났다.

중국에 와서 계림과 장가계, 황산, 항주, 북경, 내몽고, 연길, 백두산, 도문, 용정 등의 많은 여행지를 배낭을 메고, 기차와 버스, 도보여행으로 다니면서 옷차림과 악세서리를 자유롭게 하고 다녔던 것이 외모상으로는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으로 보였던 것이다. 기차안에서 하루가 넘는 오랜 시간을 앉아서 여행을 하면 피로감이 있었겠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이러한 유쾌한 여행이 그 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게 해 주었다.

### 2. 청도, 맥주와 쇼핑의 관광도시에 방이 없다.

이튿날 오후에 청도역에 도착을 하여 역 가까이에 숙소를 찾았으나 마침 청다오 맥주로 유명한 청도가 해양축제 기간이라 몇 군데 찾아가 보았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택시를 타고 방을 수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한국에 있는 여행사 친구에서 국제 전화를 통해 부탁을 하





기차안에서 만난  
중국인들

였다. 중국의 택시기사는 여러 곳에 전화를 해보고 4성급 호텔을 구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차에 한국에 부탁한 친구가 마침 여행사에서 미리 예약한 3성급 호텔이 있어서 그 곳에 체류를 하면서 중국에서의 여행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상과 같이 배낭여행을 하며 살펴본, 세계의 거대 관광시장 중국관광의 동향과 변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2010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5,566만 명으로 동기대비 9.4% 증가하고, 중국 관광산업 총수입은 5,900억 위안으로 19%가 증가하였다. 2009년 5월 1일부터 실시된 '여행사 조례'에서는 중국 관광시장의 외국인 투자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 외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해남도의 면세정책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해남도가 새로운 국제 관광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고, 상하이(上海), 시짱(西藏), 광시(廣西), 윈난(云南) 등 각 지역별 관광 진흥책을 통해 지방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당지역의 관광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관광시장의 새로운 변화 특성은 주요 소비층은 개방된 사고를 지닌 젊은층이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여행정보를 수집하고 친구나 가족, 직장동료와 함께 하는 그룹여행을 선호 있다. 그리고, 여행 계획 기간이 길고, 서양인들이 여행 경비에서 숙박비에 대한 지출이 큰 반면 중국 여행객들은 여행경비의 절반 이상을 쇼핑에 지출하고 있다.

국내여행의 경우 명승지 관광 등 단순한 유람에서 컨벤션,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관광, 리조트 레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 부유층의 해외여행으로 현재 중국에는 약 96만 명의 천만장자와 6만 명의 억만장자들이 있고, 이들은 여가생활로서 주로 관광을 즐기고 있다. 2010년 천만장자들의 연평균 휴식일수는 15일로 연간 3회 정도 출국하고, 억만장자들의 연평균 휴식일수는 16일로 연 4회 정도 출국하였다. 또한, 여행 목적의 출국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성과 자산 5천만 위안(한화 10억 원 상당) 이상의 부자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해외 관광지는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몰디브, 싱가포르, 이태리, 스위스, 두바이, 하와이 순(대한상공회의소, 2011)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배상일, (2002), 『배낭여행 중국』, 선 미디어.  
박지민, (2011), 『중국의 자연유산』, 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2011), "중국의 경제동향".

# 부탄이 만든 행복의 철학, G N H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백운성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히말라야 산자락의 작은 나라, 부탄.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행복순위에서 매년 상위에 올라있다. 부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

## 호기심 천국! 부탄



〈지도로 본 부탄의 위치〉

부탄은 시간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은 특이한 나라이다. 이 나라는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의 중심부에 묻혀, 스스로 몇 세기동안 다른 세계와 동떨어져 고립된 상태로 지냈다. 1974년부터 시작된 신중한 개방 이후 여행자들은 이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 경이로운 풍경과 건축물들, 친절하고 매력적인 사람들, 그리고 독특하고 순수한 문화는 이 나라의 매력들이다.

풍부한 자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부탄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발전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피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옛 문화와 자연 자원, 그리고 그들의 불교식 생활양식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부탄은 과거와 미래에 양 발을 걸친 채 침착하게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육지뿐만 아니라 부탄은 우리나라의 약 1/5 면적으로 인구는 약 70만 명 정도의 조그만 나라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고도 2,000미터 이상의 산악지대로 평야가 거의 없어 지도를 펼쳐보면 주변 국가와 다른 특이한 형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인도의 보호 아래 있었으며, 티베트 문화권에 속하고 티베트와 같이 통상수교거부정책을 써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도는 부탄과의 국경선에 여행 금지선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외국인 입국자가 가장 적은 비경(秘境)으로 존재한다.

부탄은 지정학적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식민화된 적이 없다. 인도의 영국 식민시대에 현재 군주제가 만들어졌고, 1910년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외교권과 국방권이 영국으로 편입되었다. 1949년 인도가 독립하면서 부탄과 인도는 10가지 조항을 포함하는 영구 조약을 맺었다.

부탄은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이며 경제 규모도 협소하다. 주요 경제는 농업과 임업으로 국민의 60% 가량이 여기에 종사한다. 최근 들어 수력 개발 잠재성과 관광산업 발전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교육과 사회경제적 발전 계획이 미비하여 다방면의 경제발전은 힘든 상황이다. 또한 경제개발도 환경과 전통문화 수호를 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지리적 고립과 정부의 고립정책에 따라 부탄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고유문화를 지켜올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있는 종교는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를 규정하고, 자연과의 친화로 자연을 닮은 그들의 정신은 순수 그 자체를 의미한다.

## 부탄으로 가는 길...

부탄으로 들어오는 장소는 두 곳으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부탄의 유일한 공항인 파로공항을 통해 비행기로 도착하며 몇몇은 인도와의 남부 접경인 푸엔트솔링(Phuentsholing)을 통해 육로로 도착한다. 출입국은 어떤 경우라도 모두 부탄의 국영 항공사인 드룩에어(Druk Air)로만 가능하다. 드룩에어는 다른 항공사와의 제휴 관계가 없으며 부탄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항공사이므로 여행자들은 드룩에어가 취항하는 곳에서 스스로 비행기 티켓을 사야만 한다. 현재 드룩에어는 네팔, 태국, 인도, 카타르에서만 출항하고 있으며 향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취항할 계획이다.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파로로 출발하는 항공편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극적인 장관을 볼 수 있다.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여행세는 호텔에서 묵든, 트레킹을 떠나든 약 미화 200불이다. 이 금액은 모든 숙소와 음식, 부탄 내의 육로 교통수단, 가이드, 포터, 짐 나르는 동물,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위치, 계절, 그리고 요구하거나 제공된 그 어떠한 숙소 형태와도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부탄은 국가정책으로 관광객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방문할 수 있는



〈부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항공기 드룩에어와 파로공항〉

곳이 아니다. 최근 부탄의 관광객은 연간 약 30,00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약 65,000명 수준으로, 2013년엔 약 100,000명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호텔과 가이드 등의 수와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탄의 문화와 전통,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될 것이다.

## 부탄이 말하는 행복이란...

어떻게 해서 부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 원인은 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발전 계획에 있다.

오늘날 부탄을 있게 한 선각자는 3대 국왕이었던 도르지 왕추크 국왕이다. 왕추크 왕은 당시엔 개념조차 희미했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했다. 즉, 자연을 파괴하고 소모시켜서 국가 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호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왕추크 왕은 국민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개념이 아닌,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개념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나라는 생산이 목적이 아닌 행복이 목적인 나라가 되겠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문호를 개방하고 국가의 ‘현대화’에 전력을 쏟으면서 UN 회원국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부탄의 4대 국왕인 ‘지그메 싱예 왕추크’ 국왕에 들어 부탄의 발전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많은 업적을 이룬 왕추크 국왕은 2006년 말,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 부탄을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였다. 국왕이 혁명이나 전쟁, 외압없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물러난 것은 인류 역사상 이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나라의 힘이나 진보는 「생산」이 아니고 「행복」으로 측정하자고 하는 이 「GNH(Gross National



Happiness)』는 1976년 제5회 비동맹 제국 회의에서 부탄의 원츄크 국왕(당시 21세)의 「GNH는 GNP보다 보다 중요하다」라는 발언에서 발단되었다고 전해진다. 물질적인 풍부함 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풍부함도 동시에 진보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츄크 국왕은 1960년대~70년대 초, 선진국의 경험이나 모델을 연구한 결과, 「경제발전은 남북 대립이나 빈곤 문제, 환경 파괴, 문화의 상실로 연결되어, 반드시 행복하게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GNP 증대 정책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의 증대를 요구하는 GNH를 강조했다. 「개발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중심으로서 행해져야 한다.」 GNH란 부탄의 개발 철학이며,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다.

## GNH(Gross National Happiness)란 무엇인가?

1972년 당시의 통치자였던 지그메 싱게 왕츄크(Jigme Singye Wangchuck) 전 국왕은 국민들이 물질적 풍요와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경제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후생지표를 국민총행복이라고 명명하며 국민총생산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을 추구할 것을 역설하였다.



〈부탄불교 최대의 성지 : 탁상사원〉

경제발전은 불교적 전통 문화에 기초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적 발전만을 평가하는 GDP를 대체할 수 있는 GNH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부탄정부는 GNH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2008년 11월 제5대왕 즉위 이후 GNH를 국가 정책의 기본틀로 채택하였다. 현재 GNH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GNH란 부탄의 개발 철학이며,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일률의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으나 지표로서 수치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1999년에 부탄 연구 센터가 설립되어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GNH라고 하는 개념의 아래, 부탄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축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 1축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촉진

(the promotion of equitable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 2축 - 문화적 가치의 보존과 진흥(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values)

### 3축 - 자연환경의 보존(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 4축 - 바람직한 거버넌스체제의 확립(the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국민총행복 지수는 부탄인의 총체적인 행복과 후생 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되는 9개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몇 가지 지표에 의하여 평가된다.

#### ①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로서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행복이 부탄왕국이 추구하는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명상과 기도 등과 같은 종교적, 영적 활동 등이 반영된다. 이를 위해 각 학교마다 종교활동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리적 웰빙지표는 일반적 심리 지표(general psychological indicators), 정서적 균형 지표(emotional balance indicators), 정신적인 지표(spirituality indicators)로 구성되며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 질투, 좌절,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 관대함, 동정심, 평정심 등과 같은 긍정적 감정, 명상과 기도와 같은 영적 활동 등이 척도로 측정되어 조사 결과를 수량화한다.

#### ② 시간의 활용(Time Use)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영역으로 노동 시간 이외의 시간이 행복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나타낸다. 시간의 스케줄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총근로시간지표, 수면시간지표로 구성된다. 수면과 자기계발, 공동체 활동, 교육과 학습, 종교와 사회 및 문화적인 활동, 운동과 여가활동, 그리고 여행 등에 활용한 시간뿐만 아니라 살림을 하고, 애들을 키우며,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가사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 ③ 공동체 활성화(Community Vitality)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 사이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족활력 지표, 안전지표, 상호호혜지표, 신뢰지표, 사회후원지표, 사회화지표, 친족친밀도지표로 구성되며 가족, 안전, 상호의존, 신뢰, 사회적인 봉사, 공동체 참여도, 그리고 친척과의 친밀도 등을 측정한다.

#### ④ 문화·전통(Culture)

문화적 전통의 유지는 부탄의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은 부탄인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창의력 배양에 크게 공헌한다. 이를 위하여 복장이나 건축물을 비롯, 많은 부분에 부탄의 문화와 전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적 전통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언사용지표, 기초인식지표, 가치전달지표, 장인기술지표, 전통스포츠지표, 지역사회 축제지표로 구성하며 방언, 전통, 운동, 공동체 축제, 예술적 기능, 가치관의 전파, 기본적 통찰력 등을 측정한다.

### ⑤ 건강(Health)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타국과 비슷한 사례로 건강상태지표, 건강지식지표, 보건장벽지표로 구성되며 질병의 발생, 질병의 전파에 대한 지식, 건강증진 시설 등을 측정한다.

### ⑥ 교육(Education)

부탄을 이끌어 가는 힘은 교육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미래를 전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교육달성도지표, 지역언어지표, 민속 및 역사적 문헌해독지표로 구성되고 자기학습 및 탐구를 조장할 수 있는 조직, 문맹률 등을 측정한다.

### ⑦ 환경(Ecology)

환경은 부탄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영역이며 관광객 수의 제한 및 기타 여러 정책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생태학적 다양성과 회복력을 측정하기 위한 생태환경악화지표, 생태환경지식지표, 조림지표로 구성된다.

### ⑧ 생활수준(Living Standard)

의식주 등의 기초생활수준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경제보다는 행복의 기반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의식주 등의 기초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소득지표, 주택지표, 식량안보지표, 곤궁지표로 구성된다.

### ⑨ 거버넌스(Governance)

정부의 부패를 막고 평등을 추구하는 정도를 다루고 있으며 행정의 질이나 효율성, 정직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성과지표, 제도에 대한 신뢰지표로 구성된다.

GNH의 72개 세부지표는 2년마다 측정하고 있다. 과거 몇몇 주를 대상으로 약 800명 정도 조사했지만 2011년은 전체 주의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올해의 조사결과는 12월 경에 발표될 예정이며 6개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

## 부탄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곳은?

부탄의 행복은 종교적인 삶과 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함께 녹아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기반에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맑은 정신이 깔려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다른 국가와는 특이하게 부탄에는 GNHC(국민행복위원회,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와 CBS(부탄연구센터, Centre for Bhutan Studies)란 두 기관에서 부탄의 행복을 가꾸고 있다.



〈국민행복위원회 방문〉



〈타시초중 : 정부종합청사이자 사원〉

GNHC는 부탄정부 정책 전반에 걸친 기획과 심의기능을 담당했던 ‘기획위원회’가 2008년 1월 24일 ‘국민행복지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임무뿐만 아니라 총괄위원회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GNHC의 주요 임무는 국가 정책에 GNH를 반영하고, 이러한 정책이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GNHC는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의장에 내각장관, 회원으로서 모든 부처의 장관과 국가환경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간사에 GNHC 서기관으로 구성되며 계획, 정책결정, 수행과정에 있어 GNH를 구현시키는 것에 커다란 목적이 있다.

CBS는 사회과학과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부탄 유일의 연구기관으로 1995년 설립 후,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통하여 GNH의 이해와 적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NH의 연구 및 적용과 부탄의 경제, 역사, 종교, 사회, 정치, 문화 및 관련 테마를 연구하며 출판과 웹상의 공유를 통해 부탄의 학문을 장려하고, 각종 국내외 회의와 세미나 및 강연 등을 개최한다.

부탄은 국민 1인당 GDP가 낮은 저소득 국가이다. 하지만, 부탄에서는 「당신은 행복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행복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각 나라별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부탄의 행복에 대해 절대적으로 부러워만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나 물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반대로 해치고 있을 것은 없는가? 부탄의 GNH가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삶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탄연구센터 전경 및 회의모습〉

## 과학벨트는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야 성공한다



육동일 |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위원,  
충남대 교수

**입**진년 새 해가 밝았다. 흑룡의 해이기도 한 올 해는 희망속에 비상하  
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작년,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  
권을 중심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학벨트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거점지구로 충남 연기군, 천안시, 그리고  
충북 청원군은 기능지구로 확정됐다.

이제 충청권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기초과학의 허브’로 조성함으로써 선  
진국으로의 진입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역사적 사  
명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대전은 물론 충청권 전체 주민의 미래  
삶도 과학벨트의 성공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 7월 1  
일, 세종특별자치시로 탄생하게 될 세종시와 세종시민의 운명은 이제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간 숏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렵사리 세종시 원안을 지켜낸 충  
청민들이 앞으로 국가와 충청권 그리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과학벨트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중단없이 정상 추진되도록 촉  
구하는 것이다. 지금 과학벨트는 그 입지만을 서둘러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다.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조달방법도 불확실하  
다. 부지조성비용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역에 떠넘긴다는 우려도 커지  
고 있다. 게다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역할분담도 모호해서 상호 연계협력  
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도 걱정이다. 그러니 세종시의 우여곡절을 속 다 태우  
며 지켜본 대전과 충청민으로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하나는, 과학벨트가 반드시 지역발전과 연계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의 성공적 사례들  
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 남동부의 테크노밸리 ‘리서치트라이앵글 파크



(RTP)는 1950년대 담배와 목화를 주산지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지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첨단 산업과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심도시 랠리시, 더럼시 및 채플힐시 등은 3개 도시를 연결한 삼각벨트를 조성하여 상생발전에 성공했다. 각 도시에 소재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과 사립대학 듀크대학 등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했다. 과학벨트 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났고 지역의 전체 소득은 급상승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속에 미래에 대해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의 좋은 학교와 대학에서 육성되어 과학단지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필란드의 지역균형발전을 성공시킨 오타니에미 과학단지, 21세기를 이끌어 갈 세계 10대 첨단과학기술도시 인도의 실리콘벨리 방갈로르 등이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가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대전과 충청, 그리고 세종시와 지역민들은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다음의 과제들을 착실히 풀어가야 할 것이다. 먼저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 과학벨트의 입지는 지역발전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대전시, 충남·북, 그리고 세종시의 비전과 목표는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기회를 소외되는 사람없이 확대하는 것이다.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소득이 증대해야 하며, 지역의 인재가 육성되어 지역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 전통산업들도 과학벨트와 연계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의 성공적 사례 뒤에는 지역 지도자의 빛나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다. 실리콘벨리를 조성케 한 스탠포드의 터만 교수,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변모시킨 지역정치가 라피드, 농촌 마을 미국 달톤시를 세계 최고의 카페트 도시로 만든 평범한 시골소녀 에반스가 바로 그 성공 리더십의 주인공들이다. 대전, 충남·북, 그리고 세종시도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치밀한 전략을 만들고 지역의 대화합을 이끌어 낼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벨트가 입지한다 해서 과학도시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과학적 사고와 활동이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과 연계될 때 명실상부한 과학도시가 된다. 외지로부터 새로 유입되는 사람과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성과 관용성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 지 40년이 다되어 가는 대전시도 도시문화와 시민의식을 재정립하여 세계수준의 과학도시로 재탄생해야만 한다. 내년이면 세종시민의 위상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세종시민도 과학시민, 특별자치시민, 그리고 광역시민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제가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일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된 오늘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지역이 행정구역의 틀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이다. 각 자치단체들은 국경보다 더 높은 벽을 쌓아놓고 지역 간, 자치단체 간 협력하지 않는다.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을 설정해서 지역의 광역적 발전을 촉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공적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도 대전, 충남·북,



세종시는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협력해야 한다. 과학적 활동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은 행정 구역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뉴욕, 런던, 동경, 토론토 대도시권 등은 세계 최상급의 국제화된 도시이며 모두 대단위 도시권 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전, 충남·북, 세종시는 대도시권역권 차원에서 주요 항공교통의 결절지로서 청주공항을 키우고 국제기구 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유치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처럼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한 세계적인 과학의 메카로 발전하는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행정구역 속에 4개 시도가 계속 안주해 버린다면 미래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충청권은 대단위 권역 속에서 과학벨트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의 활력과 주민들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교통, 취업, 환경, 교육, 치안,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지금부터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디지털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고 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다. 하나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도시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상에 구축된 가상도시이다. '사이버 헬싱키'는 오프라인상의 주택, 거리, 공원, 백화점, 관공서, 미술관 같은 도시 전체를 사이버상에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 전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우리도 '리얼 사이버 충청권'을 인터넷상에 구축한다면 충청권 지역의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 고속정보화, 지방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반면, 점차 지역 간 협력행정이나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간 공동투자, 공동협약, 개발신탁 등 지역협력의 방안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절호의 기회를 다시 맞고 있다. 그런데 대덕특구가 과학벨트의 조성하고 함께 성공하려면 충남·북, 세종시와 협력해서 자금, 인력, 기술 등이 교류되어야 하며 과학벨트와 특구개발의 파급효과가 대전은 물론 충남·북과 세종시에 까지 극대화되도록 준비단계부터 같이 검토해야 한다. 또 충남이 백제권·내포문화권개발을 비롯한 4대전략산업 육성 계획들도 대전시와 같이 협조해 나갈 때 그 성공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요컨대, 세종시 문제를 공동 대처해 온 대전·충남·북은 이번 계기를 통해 꼭 닫혀있는 행정구역을 넘어 공무원간, 대학간, 기업간, NGO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충청권은 과학벨트의 조성하고 함께 같이 발전해야 한다. 개별적인 발전은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청권 자체의 발전과 함께 영남권, 호남권과 충청권과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도 과학벨트의 조성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올 해는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흑룡처럼 상승의 기운을 타고 충청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삶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새해 벽두부터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할 것이다.

##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권경득 |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고용률은 22.9%로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며, 매년 하락추세에 있다. 미취업 청년층의 증가는 당사자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재정부담 및 산업인력의 노쇠화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이 우려되므로 국가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청년층 고학력자의 실업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에 한정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개방화·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해외취업진출을 통한 청년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해외취업진출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해외 인적교류를 통한 새로운 기술 획득, 해외 직장 경험 등으로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등 경제외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등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해외취업·연수 활성화를 통한 청년 고용 촉진에 있으며, 대상자는 학교 졸업(예정)자, 청년실업자 및 취업 애로층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해외 구인 수요처 발굴 강화」, 「우수 민간기관 육성 및 활용」, 「해외연수 참가자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이 있다.

해외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청년해외취업프로그램의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만큼 높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집행은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취업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들로 구성된 ‘해외취업 거버

년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해외취업 시장의 경우, 그 예측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구축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고 있는 해외인턴프로그램의 경우, 취업률이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실시하면 보다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권역별)로 대학 간 연계를 통한 해외취업의 활성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초기단계에서는 교육내용, 강사, 시설 및 장비, 재정, 교육생 등에 대한 기준 준거틀(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별 취업관련 통계조사시에 '해외 취업률 지표'를 추가하여 대학의 취업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취업률 평가에서 해외취업에 대한 가중치를 높일 수도 있다. 해외취업률 파악은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출입국입증 서류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대학별 해외취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해외공관의 투자진흥회의에서도 해외취업이 주요 의제에 포함될 정도로 해외취업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관심은 높은 실정이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국가별 대사 실적평가에서 해외취업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취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의 지원 분야는 취업 해당 국가와의 취업비자 문제의 해결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업비자를 쿼터제로 운영하고 있어 해외취업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요양보호사 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해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하여 취업비자의 문제를 해결하

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해외취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살아있는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 주어야 한다.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의 현실 인식과 비전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실시한 청년해외취업관련 조사결과에 의하면 상당수 대학생들이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취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인식을 상당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어 해외취업을 위한 어학프로그램과 연수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다면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지 기업인들은 '한국 청년들이 성실성과 근무태도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언어문제, 현지인과 다른 생활습관 등이 청년 해외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언어장벽의 극복과 상이한 문화에 대한 적응이 해외취업에 있어서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외취업대상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청년해외취업연수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취업 고학력 인력에게 있어서 해외취업은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국가적 난제(難題)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해외취업 확대는 새로운 차원에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청년해외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생활 · 공업용수 수요 관리 종합계획 마련

— ‘물 부족 대비’ 용역 최종보고회  
…대체용수 개발 등 제시

2015년 충남도내 생활 · 공업용수 부족 사태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이 나왔다.

물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 누수 절감 및 요금 현실화, 하폐수 재이용, 대체용수 개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12월 5일 도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구본충 행정부지사과 도내 16개 시 · 군 상수도 업무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내 생활 공업용수는 ▲지방상수도 시설용량 감소 및 광역 시설용량 부족 ▲보령댐 계통 시 · 군 용수 부족 ▲광역충남서부권 등 각종 신규개발 난항 등으로 2015년부터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1일 생활용수 여유량 60만5천㎥과 공업용수 의 생활용수는 2015년 1만5천㎥ 부족으로 돌아서고, 공업용수는 현재 22만㎥가량 여유가 있지만 2015년에는 1일 55만2천㎥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년에는 생활용수가 1일 24만1천㎥, 공업용수는 76만7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 상수도 공급은 시 · 군별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배분계획 재조정 및 신

규 공급을 통해 해결하고 ▲생활용수는 광역상수도 우선 분배 ▲공업용수는 각 공단 공장별 중수도 설치 유도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상수도 누수 절감 및 우수 수량 증대를 위해 ▲2천270km의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666km 신설 확충 ▲수도계량기 교체 15만2천개 누수 탐사 등을 실시한다.

절수기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만개씩 보급한다. 대체용수 개발을 위해서는 중수도 확대 설치, 신설 관공서 및 학교 빗물 이용시설 설치, 하폐수 재이용시설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1인당 물 사용량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요금은 낮은 만큼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총 소요 사업비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764억원(유수율 제고 8천900억원 포함)으로, ▲중수도 보급 54억원 ▲절수기기 보급 16억8천만원 ▲빗물 이용시설 92억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에 169억1천만원 등을 투입한다.

## 충남도, 행정혁신 본격 돌입

—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 계획” 발표

충남도는 21세기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고의 자치정부 구현”을 위한 충

남형 행정혁신 모델을 정립하고, 행정혁신 추진 체계 구축과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내용으로 하는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 계획을 12월 1일 발표했다.

행정혁신 추진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충남형 행정혁신 모델”을 정립, 일 잘하는 지방정부, 존경과 신뢰받는 공직상 정립과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추진 전략으로는 ▲공무원의 지식 전문 창의성을 업무에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자기주도적 행정’ ▲정책 당사자와 전문가, 이익집단, 도민 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 행정’ ▲부서간 칸막이 제거 등 종합 통합적 업무 처리로 효과를 거두는 ‘융·복합 코디네이션 행정’ 등을 제시했다.

추진단계로 민선5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10. 7~’11. 12)는 도입 조성기로 혁신업무 실천을 위한 모델을 정립 등, 2단계(’12. 1~’12. 12)는 실행 및 확산기로 분야별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 3단계(’13. 1~’14. 6)는 혁신문화 정착기로 혁신과제 평가·환류를 통해 성과 창출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로, 행정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충남행정혁신위원회 설치 ▲혁신관리담당관 기능 강화 ▲행정혁신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을 내용으로 행정혁신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민·관 협력체인 충남행정혁신위원회는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혁신과제의 발굴 및 채택 등 심의와 혁신정책 자문으로 혁신과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혁신실적 성과를 인사 및 보상체계와 연계하여 직무성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혁신 친화적 조직을 정립하고 유동정원제 운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처하는 등 실적과 능력 중심의 발탁 승진 제도 활성화 등 기존 행정행태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충남형 행정혁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원모임 등을 활용한 교육 및 사례 발표 ▲이행력 담보를 위한 ‘혁신 계약제’ 실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혁신 제안함’ 설치 ▲민간 주도형 ‘충남형 혁신포럼’ 출범 및 지원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충남도, 2012년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내놔

- 4개 분야 9개 모델코스, 생태체험 추가, 홍보책자 제작 추진 -

“2012년 수학여행은 갯벌, 생태, 역사, 국악체험이 가능한 충남으로 오세유~ 체험학습 위주의 4개 분야 9개 모델 수학여행 코스 좋아유~”

충남도는 기존의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해안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코스를 추가한 2012년형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수학여행 코스는 지난 8월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한 역



사·문화·생태·국악체험 위주로 개발했다.

특히, 직접 몸으로 체험하려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어 태안의 만대마을, 벚가리마을, 별주부마을 등에서 어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 코스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에 개발한 수학여행 코스를 책자에 담아 홍보할 계획인데, 기존의 홍보물과는 달리 기행문 형식으로 충남의 관광지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숙박시설, 맛집, 여행 팁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을 생각이다.

이번에 제작하는 홍보책자는 서울시 및 각 시·도 교육청 등에 배포해 내년 봄, 가을 수학여행 최적지가 충남임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도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학여행 모델코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가는 한편, 수학여행 관계자 팸투어를 추진하고, 수학여행단에 게 제공할 홍보용 팸플릿도 별도로 제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백제역사·문화, 해양, 생태, 갯벌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관광코스가 수학여행단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학여행 코스를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홍보책자와 다르게 충남의 관광지를 재미있는 기행문 형식으로 꾸미고 숙박시설, 맛집, 여행 팁 등을 담은 홍보책자도 수학여행단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3농혁신, 대한민국의 뿌리 살리자는 것”

— 안희정 지사, 11월 28일 한농연  
한여농 도 임원과 간담회 가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1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농연 및 한여농 도 및 시군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3농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내 농민단체 임원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한농연과 한여농 도 임원과 시군회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농혁신 설명과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3농혁신 설명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 허승욱 위원장이 그동안 추진해 온 경위와 11개분야 347개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맡았으며 안희정 지사는 모두발언과 간담을 직접 주재하면서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개선되는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우리의 뿌리인 농촌의 미래 없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





기 때문에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3농혁신은 기존 농업정책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것으로, 이는 농업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와 산업, 경제, 마을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융·복합된 과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이어 “농업은 농촌을 살릴 수 없지만, 농촌은 농업을 살릴 수 있다”며 농촌을 농업인의 공간이 아닌 도시민과 함께 공유해가는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인식과 “친환경 급식 등 지역 소비자와 순환식품체계 형성, 유통망과 공급망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충남도, '12년 국·도 비지원 축제 선정 심사

— 문화관광축제 추천 대상 7개, 도비 지원 향토문화축제 순위 결정

충남도는 11월 22일, 제3차 축제육성위원회(위원장 박웅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2012년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7개 축제를 추천키로 했다.

내용을 보면, 올해의 기존 4개 문화관광축제로 당연 추천 대상인 ▲천안 홍타령춤축제 ▲금산 인삼축제 ▲강경 발효젓갈축제 ▲서천 한산 모시문화제 ▲예산 옛이야기축제 ▲부여 서동연꽃축제 ▲홍성 내포문화제가 이번 심의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추가되었다.

아울러, 도는 내년 도비를 지원할 향토문화축제를 선정하기 위해, 위 7개 추천 축제 외에 나

머지 12개에 대하여 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한 청양 칠갑문화축제는 통·폐합 지원 축제로 결정했다.

심사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공모를 거쳐 시장·군수 등이 추천한 축제 가운데, 기존 문화관광축제를 제외하고 제안 설명과 서류 심사를 통해 비공개 일괄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지켰다. 특히 이번 심사는, 충남도의 기본 방침인 ‘민간 주도·자립형’ 축제 육성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주민 참여도와 자립도에 큰 비중을 두어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문화관광축제는 12월 중순 경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도비 지원 향토문화축제는 중앙 탈락 축제를 포함하여 이미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저절로 결정이 된다. 등급별로 ▲최우수 1개 ▲우수 1개 ▲유망 1개 ▲예비 등 모두 7~8개 정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원액이 정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축제 심의는 새로운 채점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 해당 시·군에서 제안 설명에 열의를 보이는 등 관심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道 대표축제는 민간·자립형을 지향하는 축제가 선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중인 일몰제에 준하는 가칭 휴면기를 도입하려던 방침은 내적 동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으로 도입하지 않고, 현행 지원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지역의 내발적 발전 연구 역량 한데 모았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2월 13일 대전레전드호텔에서 ‘2011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 연구보고 및 제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충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충남도의회 의원, 각계 전문가, 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부 순서에서는 올해 추진된 20건의 전략과제 중 지역의 내발적 발전 전략과 연계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6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오후 2부에는 연구원 내외에서 제안된 총 9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22건을 대상으로 내년도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사는 ▲지방행정 ▲지역도시 ▲지역경제 ▲농촌농업 ▲문화디자인 ▲환경생태 등의 분야별 전문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총발연 연구진과의 과제별 종합토론을 거쳐 전략과제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총발연 관계자는 “내년도 전략과제는 12월 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비록 심사에서 탈락한 과제라 할지라도 연구성격에 따라 현안과제, 수탁과제, 연구조성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의 전략과제가 도 및 시·군정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 내발적발전 모색 위해 아시아 4개국이 한 자리에

— 충남발전연구, ‘내발적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도전과 실천’ 국제심포지엄

지역의 내발적발전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2월 8일 대전레전드호텔에서 개최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화의 물결속에 불어닥친 양극화와 지역의 불균형 문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네트워크에 포섭되지 못한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쟁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기조연설 “세계화와 지역의 대응; 충남의 내발적 발전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일본 동경농공



대학 센가 유타로 교수의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내발적 발전”, 중국인민대학교 왕지강 교수의 “지역재개발(CRR)에 대한 사회적 참여 방법 연구”, 필리핀 마닐라대학교 저멜리노 M. 바티스타 교수의 “필리핀 농업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여행범 책임연구원의 “내발적 발전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충청남도 남궁영 경제통상실장, 충북발전연구원 이경기 연구실장, 공주대 정환영 교수, 중도일보 조성남 주필, 서울대 최영찬 교수 등이 참석해 지역의 올바른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세계화에 밀려 있는 지역의 발전전략으로 내발적발전을 제시하고, 각국의 정책현황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해 관련정책연구에 반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 농업 · 농촌 · 농민문제 함께 풀어보자

— 11월 18일, 충남발전연구 · 지역  
재단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합  
동워크숍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재단,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농업 · 농촌 · 농민문제 해결의 길”이란 주제로 합동워크숍을 가졌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청양군 칠갑산휴양림에 모인 60명의 연구진과 현장활동가들은 한국 농업 · 농촌 ·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책 마련과 실천을 강조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대형유통자본에 의한 자영업자의 몰락과 중소기업 및 농촌경제의 쇠퇴는 삶의 공간인 지역을 위협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환경과 주민의 삶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지역의 문제를 지역구성원이 스스로 인식, 자율과 협동을 통해 해결하거나 가치를 창조해 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농업 확대와 로컬푸드 체계 구축 ▲지역특화 · 향토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지역문화 기반의 소프트파워 강화 ▲지역리더 양성과 귀농귀촌, 도농교류 활성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도 및 시 · 군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농업은 시장의 원리가 아닌 협동

과 연대가 관건”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 그리고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민영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리는 농업·농촌을 생명의 기초이고 원천이며, 식량만을 생산하는 단순한 산업, 공간이 아니라고 말해왔으나, 오늘날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공공적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와 기능, 공공적 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식량생산, 식품소비, 그리고 국민건강에 이르기까지 농업·농촌과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식습관이 형성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황민영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진행으로 친환경유기농업운동의 현황과 생산자조직의 과제 ▲로컬푸드·공공급식과 대안 먹거리 운동 ▲당면 충·

대선 정세와 대안농정 의제 ▲현 단계 농민운동의 과제와 실천대안 ▲내발적 지역발전과 지역리더 양성 과제 등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위한 발표와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 충남발전연구,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수도권 기업유치 등 국토균형발전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객관적 평가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 예방과 상생방안을 토론하는 장이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공간환경학회, 그리고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전·충남·충북발전연구원과 충청남도가 참여한 가운데 11월 2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와 1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도권 규제정책 평가와 대응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11월 2일에는 서울대학교 김안제 명예교수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 중앙대 마강래 교수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과 중부대 강현수 교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 치유 및 상생협력 방안” 주제발표

가 있었다.

이어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 목원대 박경 교수, 세종대 변창흠 교수,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 연합뉴스 이은파 부장, 국회 이창호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대학교 김안제 명예교수(현.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는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활동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밀·과소의 폐단과 비경제성을 증가시키며, 지역간-주민간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 규제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간 추진되어 온 세종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이므로 적극 추진하여 당초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지방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 간 차별화를 도모하는 시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은 “수도권 정책 논리의 바람직한 판단기준은 단기적인 정책목적이나 특정집단·지역의 이해보다는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 잠재력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국가발전기반의 확보’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자기 지역만의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월 6일에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기조강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시작으로,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의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 평가와 개선 과제”, 정준호 강원대 교수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 편익 추정”, 그리고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좌장으로 강현수 중부대 교수,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수상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장, 김홍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무국장, 변용환 한림대 교수,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감론을박을 펼쳤다.



#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http://www.cdi.re.kr)

| 원고작성 | A4용지 4~5매, 휴먼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pr@cdi.re.kr](mailto:cdipr@cdi.re.kr)